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 아침에

단체장 護衛武士 자처…
〈호위무사〉
홍보비 많이 받나?

매년 돌아온는 날 그날은 어김없는 창간날이다.

대구광역일보가 스물여덟이라는 나이를 먹었다.

아침 책상 앞에 앉는다. 스물 여덟번째 일기를 쓴다. 생일을 맞았지만 늘 공허하다. 펜을 잡고 글 써내려가니 더욱 그렇다. 연일 계속 퍼부어대는 폭우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하다. 수해민들은 갈곳을 잃어 처막살이를 한다.

수해와의 전쟁이다. 200년만에 쏟아진 극한 폭우라 입을 모은다.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경북지역은 '전쟁터'다. '물폭탄'으로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주택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됐다. 물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엄습해오고있다. 농민들은 수마에 몸서리 친다. 수해민들은 넋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오늘도 재기의 삽질에 비지땀을 흘린다.

등록매체수가 2만개를 넘은 대한민국 언론환경(시장)에서 지방언론 종이신문이 살아남기기에는 힘이 많이 부친다. 포털사이트와 제휴의 수준(등급)이 언론시장에서 특정매체의 값어치 또는 예상수익을 결정하는, 다소 왜곡된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방언론의 사투다. '기요메의 사투'를 좇는다. 대구광역일보는 기요메의 이야기를 전하려한다.

어느 겨울, 안데스산맥을 횡단하던 기요메가 행방불명이 된다. 비행 중 안데스산맥에 불시착한 기요메, 그런 기요메를 정처없이 찾아 헤매는 동료들. 결국 모든 걸 체념한 동료들 앞에 꼬박 7일째 되던 날 기적처럼 기요메의 생사 소식이 들려왔다. "기요메가 살아있다!"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의 끝없는 사투를 벌인 기요메였다. 기요메는 그 추위 속에서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지지 않게 애를 썼다. 죽음과 맞서는 7일간의 전쟁 같은 시간을 이겨낸 기요메다.

기요메를 보면 대구광역일보와 무척 닮았다. 버려진 항무지에서 살아남아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다. 적자 누적으로 경영수지는 악화일로다. 지방언론사의 재정적 타격은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졌다. 지방의 열악한 광고시장을 둘러싸고 지방언론사들끼리 이미 과포화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방언론은 이외에도 지방언론시장까지 잠식하려는 대형중앙언론사와 경쟁을 해야하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광고중심의 생활지인 지역신문과도 맞서야하는 어려운 형국이다.

민선들어 더하다. 언론사 재갈물리기 광고 배정은 어느듯 지자체의 점유물이 됐다. 쌈짓돈 쓰듯 선심쓰는 꼴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나랏돈이 지자체 돈인냥 단체장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처하면 홍보비를 펑펑쓴다.

오늘의 현실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일부 지방언론사와의 잇단 전쟁선포, 홍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언론사들을 옥죈다. 대구시와 경북도 일선 지자체는 언론 길들이기에 혈안이다. 홍보비라는 미끼를 덥석물고 권력에 짓 밟힌 언론사는 얼마나 빨리 망가지겠는가. 그래서 나온말이 "비판기사 쓰면 광고비 집행하지마라" 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언론이 살아야 지방정부가 산다고 떠들어댄다. 역겨운 두얼굴이다. 가식이 넘치는 단체장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싶다.

예전 일이 생각난다.

김문오 달성군수시절 대구광역일보가 비판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4년간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넘어 고발하고 언론 재갈 물리기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끝내 대법원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대구광역일보의 비판기사는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본지는 시쳇말로 광고비 그게 뭣이라고 안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비판기사를 썼다. 지금 김 군수를 만나면 묻고싶다. 그때 무소불위를 휘두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말로가 참 좋냐고 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얄팍한 술수 비겁한 행동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대구광역일보는 여전히 건재하다. 잡초다. 쓰러지지도 무너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방시문으로서 해야할 일이 너무많고 솔직하게 버텨 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굳건하게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대구광역일보는 지방언론의 성공신화를 쏘아올리려 한다.

언론사는 기업, 관공서, 대학, 병원 등의 광고를 먹고 자란다. 언젠가부터 종이신문은 광고판 그 이상·이하도 아닌 것이 돼 버렸다. 언론의 정신은 엿바꿔먹은지 오래다. 그래서 난 그곳에 종사하는 기자를 기레기라 단정한다.

언론사 수는 엄청나고 기사 구독은 공짜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도 대구광역일보는 신문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 신문은 권력의 마음에 드는 글을 쓰는 곳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신문은 사실(事實·fact)을 찾아 기록하고 알리는 곳이다. 사실 속 진실은 때로 권력을 화나게 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나 세력의 증오를 사기도 한다. 두려움은 사실의 은폐와 왜곡의 은신처다.

'묘언무고금(妙言無古今)'이라는 말이있다. '한묵보감', '묵장보감' 등에 실려 있는 문구다.

"훌륭한 말(언론)은 과거와 현재의 시대 구분이 없으며 미래도 그럴 것"임을 뜻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좋은 언론은 그러한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언론으로서 새겨야 할 태도와 가치도 다양하게 품고 있다.

창간 28년 아침에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한다.

사실 속 진실 찾아 지면에 보도한다. 그게 바로 언론의 사명(使命)이자 숙명(宿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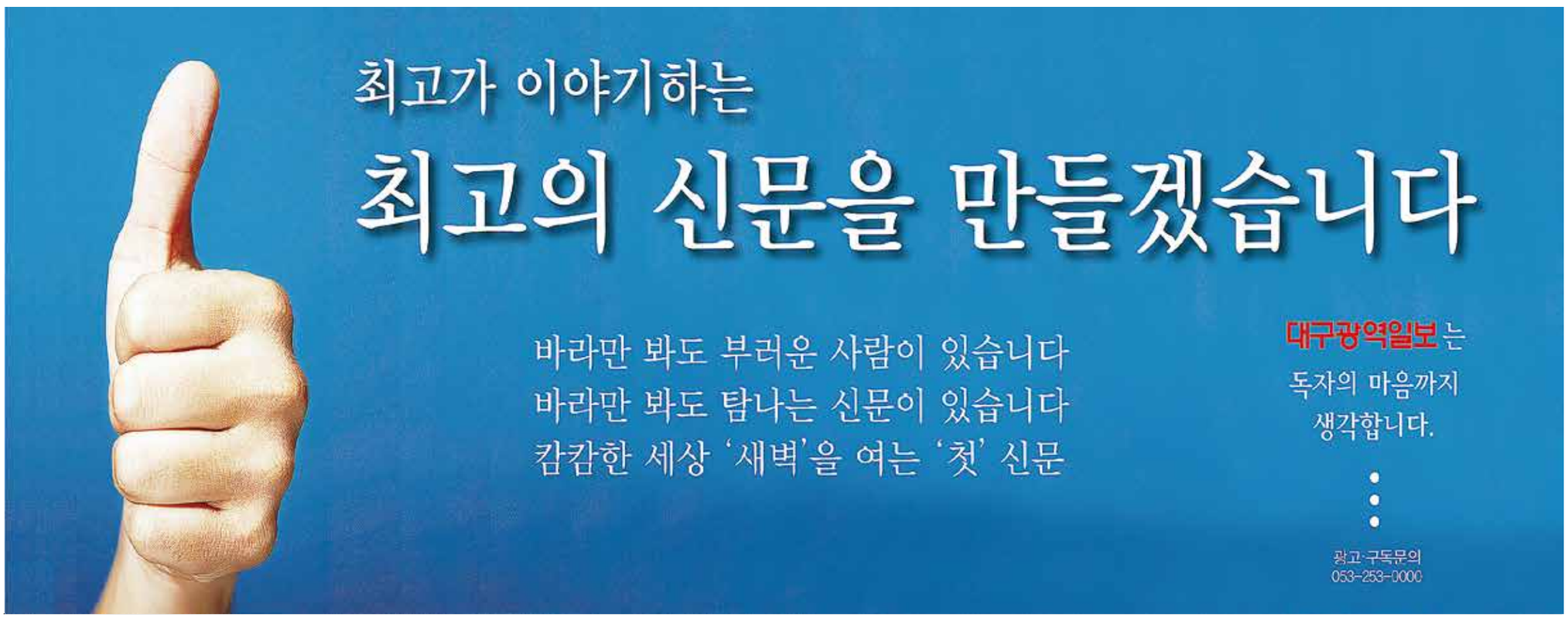
글/김성용 본지 대표

I 단체장 일정 I

최기문 영천시장은 15일 오후 영천문화원 소강당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병와 이형상과 성고9곡展 오픈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5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기획전략국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한다.

2024 대구광역일보 영덕사랑나눔 골프큰잔치 D-9



대구·경북 분리 40년… 메머드급 도시 탄생

2026년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돛 올린다
정부, 연내 특별법 제정…

지난해 4월28일 정오께 군위군 군위읍 한 음식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 단체장은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경북의 최대 화두는 대구경북통합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 도시가 된다'

두 지역을 합치면 인구 500만이 돼 서울 다음 큰 도시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 맞먹는 '메머드급 자치단체' 로 탄생한다는 논리로 통합을 외치고 있다.

정부도 전격 지원 사격에 나섰다.

대구경북은역사·행정·경제적으로한뿌리이다.

인구절벽·지역소멸이 본격화되면서 "뭉쳐야 산다"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외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셈이다.

'메머드급 도시'에 불을 지핀 곳은 대구·경북이다.

올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돛을 올렸다.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날개를 달았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백년이라는 거창한 지도를 그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다.

현재 두 시·도는 각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합안을 만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획기적인 통합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최근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자문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역발전전략 구상에 착수했다.

대구경북통합에 따른 반대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광역단체장 주도로 하향식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도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동예천도 반대하고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톱-다운(하향식) '대구경북 통합'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들 반대하면 대구·경북 통합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 · 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정부는 2026년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한다.

행안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꾸려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달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 논의에서 나온 말이다.

대구경북통합 논의는 5월18일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안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를 받는 2단계 행정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서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만들자고 했다.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두 기관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와 경북이 계획대로 통합된다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룬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간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청주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끼리 합쳐진 적은 없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시 인구는 236만8670명, 경북은 254만6120명이다.

대구경북이 합치면 491만4790명에 달한다.

인구 500만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 탄생이다.

대구와 경북 통합은 지자체가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이 제안한 지자체-국가 2단계 행정체계 개편과 이 지사의 '완전한 자치정부' 시나리오는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동반하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간 단순 통합을 넘어서, 서울시와 비등한 '힘 있는' 광역자치단체 탄생 목표다.

▣대구경북 통합 도청 · 동부 청사 더 커져"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시군 균형발전 대응책에 대해 "경북은 농업 비중이 높지만 농업은 소득계산에 거의 안 잡혀 더 가난해 보이지만, 경북에서는 지역별로 소득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역 스스로 힘을 키워 서울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 예술, 교육, 교통 같은 것을 서울 못지않게 갖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통합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통합에 대해 북부권의 걱정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이 반대하면 통합을 못 한다. 그래서 북부권 발전 방안을 통합하기 전에 반드시 내놓고 도내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설명한다"고 했다.

그는 "북부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도청이 북부에 왔는데, 통합하면 왜 또 대구로 가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청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더 크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와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청이 현재보다 더 큰 행정도시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합 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에 이미 시청이 있고 경북에 도청, 경북 동부에 동부 청사가 있으니 자치권을 확보하면 공직자 수도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 늘어나는 공직자는 대구보다는 도청이 있는 곳이나 동부청사 이런 곳에 확충하는 게 맞고 특별히 북부권에 더 많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고 구조개혁을 통해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을 받지 않고 현 상태로 단순히 통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행정통합 관련 보고를 받고 이상민 장관에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라고 지시를 했고 이 장관도 중앙회에서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해라, 세제라든지 심지어 사법권까지 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은 힘들다. 차츰 차츰, 실질적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야트막한 산에 스마트팜을 하려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홍수철이 다 오는데 하천 하상정리를 하려해도 1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우리에게 허가권이 없다.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농지라서 안 된다 하고, 산업단지도 여기 아니면 힘든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처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부터 지방이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투표에 대해선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서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주민투표 대신 대의 기관인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TK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에 총력"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은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게 이유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는 혁신성과를 시정 분야별로 100가지를 선정했다. 대구경북을 통합, 한반도 제2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 100+1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대구혁신 100+1'에는 새로운 하늘길(TK신공항)·철길(달빛철도)을 열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미래혁신과 섬유 등 전통산업을 5대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산업혁신, 먹는 물 문제 해결과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의 민생혁신이 담겨있다.

새로운 경제·문화 활력을 위한 도심 대개조 공간혁신, 기득권 타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혁신, 빚 없는 예산편성과 세금 낭비없는 재정집행의 재정혁신,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대구 위상 글로벌혁신,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등이다.

홍 시장은 "쇠락한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변화와 혁신의 100+1틀은 모두 완성했다"며 "대구발 혁신 사례가 길잡이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2년도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등 경북 북부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동의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경북의 반발 문제는 이철우 지사가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TK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어 서울과 대구가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구도로 만들고 대구경북에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 발의, 10월 양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 명친 문제 관여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율을 현행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재원 대책을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장관은 "재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통교부세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으로, 현재 보통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로 설정돼 있다.

이 장관은 인구 소멸 위기와 지방 주도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 경북도 양측이 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 명칭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명칭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시의 지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고, 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따라 각 지역에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한 지역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 10명 중 6명 찬성…

대구경북 시도민 10명 중 6명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나 높았다.

이들은 대구경북의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기를 원했다.

이 사실은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대구경북 만 18세 이상 1000명(대구 500명, 경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31.3%, '다소 찬성' 28.8% 등 찬성 의견이 60.2%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30.3%(적극 반대 10.4%, 다소 반대 19.9%)에 머물렀다.

찬성 의견은 3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60% 넘게 나왔다.대구(58.5%)보다는 경북(61.8%)에서 통합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대구와 인접한 공동 생활권인 영천, 경산, 청도 등지에서 찬성 응답이 75.8%로 가장 높았다.

김성용 기자

안동·예천 등 대구경북통합 반대 결사항쟁

대구·경북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고 침체된 민생 살리는데 최선 다해라

▣대구·경북 통합 절대 반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사령관에 오른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구경북의 주인은 500만의 시도민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혹여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 및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과거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축 형성을 위해 도청이 안동으로 왔고 포항의 동부청사도 신설이 됐지만 통합 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여러 사정과 시도민의 뜻을 꼼꼼하게 살펴 행정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경북도, 대구시와 대등하게 추진 상황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의회도 대구경북통합 반대 제동을 걸었다.

포문은 도기욱·권광택 도의원이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기욱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 도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인력·정보·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2 도시인 포항·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 9개 구·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경북도의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 중단이다.

그는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날을 세웠다.

그는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대구경북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권한위임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도 도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경북도가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

권광택 도의원(안동2, 국민의힘)도 거들고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 도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 수십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경북연구원을 도청 신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2023년도 대구 경북 매칭 사업들은 경북도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대구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추경의 도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며 홍 시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구시장이 경북에 들어설 지하철 역사 이름까지 줄이라고 지시하고, 차관급 부시장을 4명 두어 서울시와 동등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고 있는 분위기에서 동등한 입장의 통합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포항 안동 예천 등 결사반대

대구경북통합 반대가 격렬하다.

예천군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강경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온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경북권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의회는 "지역민의 뜻과 의견을 배제하고 주민의 공감대 없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침체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만약 통합으로 북부지역 신도시의 인구가 싹 빠져나가면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안동시의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순중 시의원을 비롯, 시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순중 시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 의회는 결의안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다.

500만 통합도시로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신도시 조성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 대구시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에는 경북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를,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반대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과 예천은 민선 7기인 2019년~2020년 진행된 경북·대구행정통합 논의에서도 반대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신도시(호명읍)와 예천읍 일대에 내걸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행정통합으로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인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도 지난달 10일 31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군도 모자라 경북 22개 시군을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안은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따졌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북 지자체를 배제한 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통합 반대 항거 거세

대구경북 통합 반대 항거가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에서 가장 거세다.

이 사실은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대구 500명, 경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결과,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의 반대가 48.7%에 달했다.

대구경북 시군구 중에서 경북 북부권만 반대 의견이 절반에 육박했다.

경북에선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을 제외하고 포항·경주·울릉 지역민의 23.7%, 김천·구미 등 서부권의 22.4%, 영천·경산·청도 지역민의 15.9%가 반대했다.

대구에서는 중구·남구 지역민의 38.4%, 동구·수성구·군위군의 36.4%, 서구·북구의 26.7%가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전체로 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대구시민이 31.8%로 경북도민(28.8%)보다 다소 많았다.

북부권 지역민 중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의 87.9%는 반대 이유(2가지 중복 선택) '통합에 따른 경제산업 발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부족해서'라는 응답 또한 65.7%로 다음으로 비중이 컸다. '통합에 따른 국가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25.4%였다.

'통합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는 11.2%, '기타'는 6.7%, '잘모름·무응답'은 3.2%였다.

통합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 지역민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꼽았다.

37.9%가 이 같이 응답했고 '미래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답한 경우는 25.7%였다.

▣이철우 지사, 도민들 반대하면 쉽지 않아"

대구·경북 통합 도민이 반대하면 통합 못한다.

이철우 지사가 한말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민들이 반대할 경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각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을 제대로 수립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통합의 가장 큰 이유다. 통합에 대한 반발이 경북 북부권에서 가장 거셀 것으로 보는데, 북부권의 발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고 동부·서부권의 발전 방안도 도민에게 설명을 하고 수용했을 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부권에서 걱정하는 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왜 또 대구로 가려고 하느냐는 이유일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도)현재 도청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더 크게 유지할 것이며, (이 부분이)대구와 합의가 안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경북도청에 대해선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면 공직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수는 대구가 아닌 도청신도시(안동·예천)나 환동해청사(포항)에 확충하는 것이 맞다. 그 약속 없이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했다. 통합 후에 도청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통합안을 토대로 공동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상해 이양받을 권한을 확정하면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연다. 주민투표는 많은 돈이 들어 여론조사와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시한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인구 50만·40만인 포항·구미시에서 자치권이 줄어들면 이해를 하겠느냐"며 "기초자치를 강화하지 않고 권한을 줄이면 시·군의회의 반발 등 통합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대구시, 구·군 등 대구도 현재 3단계 체제를 그대로 하고 있듯이 통합이 돼도 자치권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 3단계 행정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민선8기 후반 100가지 혁신 대구 '틀'바꾼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더해
대구혁신 100+1틀 완성
새로운 하늘길·철길 열고
경제영토 확장 전력투구

민선8기 홍준표號가 반환점을 돌았다.

홍 시장은 다시한번 대 혁신을 노린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 정신 2.28민주화 운동의 자유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품은 긍지 넘치는 도시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울, 평양과 함께 한반도의 3대 도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30년째 섬유산업의 쇠락과 함께 침체를 거듭해왔다.

민선8기 2년!

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미래, 산업, 민생, 공간, 행정, 재정, 글로벌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은 100+1의 틀을 완성했다.

남은 2년!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홍존표 대구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 각오다.

홍 시장은 "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은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8개가지 혁신을 부르짖었다.

◈대구혁신 100+1에 따른 미래혁신

△새로운 하늘길·철길을 열고 경제영토 확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글로벌 규제프리존 K-2 후적지 개발 △영호남 30년 숙원해결 달빛철도, 남부 거대경제권 달빛산업동맹 △군위군 편입으로 특·광역시 중 전국 최대면적 도시 △발상의 전환으로 도심군부대 통합이전이다.

◈산업혁신 △산업혁신 섬유 등 전통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ABB·반도체·로봇·반도체·UAM·헬스케어 5대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원스톱기업지원으로 2년 만에 8조 5532억원 투자유치(지난 10년간 투자유치 총액의 2배) △14년 만에 100만평 규모 제2국가산단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민생혁신 △민생혁신 먹는물문제근본해결과불합리한관행·제도개선 △맑은 물 하이웨이 프로젝트 국가주도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 확정△배달·택시 등 시민생활 공공앱 '대구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이다.

◈공간혁신 △새로운경제문화활력을위한도심공간대개조 △금호강 르네상스, 신천 푸른숲·신천 프러포즈·물놀이장 조성 △동성로 르네상스,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 플랜 △도청·교도소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다.

◈행정혁신 △기득권 타파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통폐합, 채용 거주제한 폐지, 최단기간 청렴도 전국 1위 달성 △대구發 자치조직권 확대, 전국 최초 대학정책국 신설

△연·관 공동 정책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대구정책연구원 출범이다.

◈재정혁신 △빚없는예산편성과세금낭비없는 재정집행 △민선 출범 최초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 편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채무 2000억원 조기상환 △도축장 폐쇄, 기금 통폐합, 재정특정감사 등 고강도 재정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혁신

△세계로뻗어가는글로벌대구 △장기 미집행된 대구대공원 조성, 개장에 맞춰 판다 임대 추진 △43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대구마라톤대회·대구치맥페스티벌·판타지아대구페스타 등 글로벌 축제 육성에 행정력을 모은다.

◈혁신 +1 대구경북행정통합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 도시 △인구 500만 대한민국 양대 중심축의 경제도시 △미래혁신 새로운 하늘길·철길을 열고 경제영토 확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 2년간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는 혁신성과를 시정 분야별로 100가지를 선정했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 한반도 제2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 100+1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대구혁신 100+1'에는 새로운 하늘길(TK신공항)·철길(달빛철도)을 열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미래혁신과 섬유 등 전통산업을 5대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산업혁신, 먹는 물 문제 해결과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의 민생혁신이 담겨있다.

새로운 경제·문화 활력을 위한 도심 대개조 공간혁신, 기득권 타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혁신, 빚 없는 예산편성과 세금 낭비없는 재정집행의 재정혁신,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대구 위상 글로벌혁신,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등이다.

홍 시장은 "쇠락한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변화와 혁신의 100+1틀은 모두 완성했다"며 "대구발 혁신 사례가 길잡이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2년도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등 경북 북부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동의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경북의 반발 문제는 이철우 지사가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TK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어 서울과 대구가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구도로 만들고 대구경북에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양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한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주요 핵심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한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행정 및 경제부시장, 신공항 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 등 소수 인원만 자리한 가운데 본청 실·국, 사업소, 산하기관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주도형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대행자(SPC) 선정, 취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등 핵심사업 추진 총력을 지시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용역 만능주의 타파를 위해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기간 등을 연초에 미리 따져보는 '용역 적정성 심의제'를 전격 도입한다.

핵심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정책 모니터링 체계(3색 신호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밀한 돈 관리에도 집중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세수 부족 등 재정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객관적 재정 데이터 및 통계 중심의 '통합재정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한다.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 보다 세밀한 세수 예측을 통한 체계적 세입 관리에도 나선다.

각 구·군 및 대구교육청으로 지원하던 각종 재정사업의 경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산림 재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을 탄력적으로 바꿔 나간다.

홍 시장은 올 상반기 중 TK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SPC) 선정, 4월 중 K-2(군공항) 후적지의 글로벌 신성장 거점 조성의 비전을 담은 도시특화 세부 계획 마무리를 주문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꼭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산업 대개편을 위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제2국가산단,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대구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와 유사한 '대구판 CES' 개최 준비도 특별히 지시했다.

조여은 기자

이철우 道伯 민선 8기 반환점… 최대 역점 사업은?

국가수소에너지 고속도로건설
문화관광 농업 산림 에너지 등
3대 미래 먹거리산업 집중투자

경북도 지휘봉을 잡은 이철우 道伯의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철우 표 혁신은 정책특구 34개, APEC정상회의 유치다.

그의 정책혁신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특화단지 3관왕,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도약하는데 한 축을 그었다.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단은 북부권까지 확장됐다.

이 뿐 아니다.

교육발전·기회발전특구 등 최다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혁신농업타운은 대통령도 전국최다 정책특구로 주목한 농업 대전환 실험 성공으로 평가받는다.

이 지사는 문화관광과 농업 및 산림, 에너지 등 3대 미래 먹거리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에 공급하는 '국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은 최대 현안사업이다.

민선 8기 유치현황을 보면 △포항(배터리,바이오), 안동(바이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3개

△경주(SMR), 안동(바이오생명), 영주(첨단베어링),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4개 △포항, 안동, 구미, 상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교육발전특구 8개 △포항(2), 경산(2), 구미, 안동, 예천 글로컬대학7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전국 최다 면적) 기회발전특구 4개 △경산, 의성 규제자유특구 2개 △봉화, 영양 신규 양수발전소 2개 △포항(수소연료전지, 자원순환), 구미(방산혁신, 자원순환) 클러스터 4개 등은 전국최다 정책특구 유치다.

이 지사는 경북의 성공시대를 위한 △문화관광·농업과 산림·에너지 등 4차산업혁명시대 투자 △저출생과 지역의료 문제 지방이 나서 선도모델 제시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와 대구경북 통합발전구상 실현 등 3대 미래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투자활성화 통한 경북의 신휴양벨트, TK에너지고속도로 구상도 주목 받는다.

APEC개최 후속으로 'APEC글로벌 경북'과 '신영일만 구상'이다.

대구경북 통합발전을 위한 TK·PK초광역 철도·전철망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상도 내 놓았다.

이 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경북도정 밑그림이다. 그는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졸라매고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4차산업혁명시대 '행복'에 우선 투자한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은 창의적 일에 몰두, 먹고·놀고·즐기며 아이낳고 기르는 일도 '행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 문화관광·농업·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에 중점 투자한다. 저출생과 지역의료불균형이라는 국가적 난제해결은 선도모델로 해법을 제시한다. APEC정상회의 개최와 대구경북통합으로 경북의 새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만든다.

▣3대 먹거리 청사진 제시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이제 행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주도하는 시군발전전략인 K-U시티를 지속추진한다.

농업은 혁신농업타운의 성과확산으로 농촌마을의 재구조화를 추진, 전통주를 포함한 식품산업까지 연결한다. '동해안과 백두대간은 자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때문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많이 건설, 휴양벨트를 만드는 관광대전환을 민자를 활용해 진행한다.

낙동~형산~금호강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의 3강은 강마을 정원과 에코트레일처럼 수변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민자를 활용, 대구경북 국가 수소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은 주목을 끈다.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는 울진의 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수소와 포항의 영일만항의 수소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배관망을 의미한다.

총연장 1000km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형 프로젝트로 대구경북지역 수소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천년건축으로 하회·양동마을 같은 문화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지방에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주거혁명을 지속하겠다는 정책의지도 강조했다.

▣저출생 경북 선도모델 제시

이 지사는 국가적 난제해결에 지방이 중심에 설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지역의료혁신이다.

저출생 극복은 현장을 가장 잘아는 지방정부가 더 잘 할수 있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시켰다.

'돌봄융합특구'같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인프라를 한곳에 집적시키는 선도모델을 만들었고 실행중이다.

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지역의료 특히, 산부인과·소아과·내과·외과로 대표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서비스를 책임지는 체계로 나간다.

이 지사는 도내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대개조 차원의 혁신을 예고했다.

필요하면 의료원 신축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1시간 안에 의료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의료는 이제 공공이 책임지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화두를 제시했다.

의대신설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는 안동에,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는 포항에 만들어 의료여건 개선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이 지사는 국민들이 믿음을 준 만큼 APEC정상회의를 어느 때보다 멋지고 알차게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보스포럼 같은 한류역사문화 세계포럼 개최, APEC기념 공원과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을 포함해 50년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는 'APEC 글로벌 경북 구상'을 실현해한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경북과 경주를 키우겠다는 포부다.

APEC 정상회의와 동해의 유전과 해양자원 개발에 대비해 영일만 물류인프라 확장과 영일만 대교건설을 포함한 환동해 관광활성화를 추진하는 '신영일만 구상'도 밝혔다.

국제적 행사의 효과를 경북전역으로 확산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구·경북 통합도 언급했다.

대구·경북통합은 지방을 살만하게 만들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고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과 함께 초일류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적 과업이라 평가했다.

정부의 지원약속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행정체제개편의 표준모델이다.

새로운 대구경북시대를 위한 통합발전구상을 구체화한다. 범영남권을 연결하는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을 구축한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생활경제권을 만들고, 대구경제권과 서부산업권, 북부의 행정도시권 그리고 환동해권까지 연결한다.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을 완성, 새로운 통합생활권 구상을 제시했다.

'동서 SOC트레일'과 '중부내륙권 광역발전구상'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은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철도와 전철망으로 연결해 수도권에 대응한 거대 통합 생활경제권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 순환철도망'은 통합시대의 대구광역권, 서부 산업도시권 그리고 북부의 행정도시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동서 SOC트레일'은 당진에서 시작해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계획으로 그간 부족했던 중부내륙의 영호남간 교류를 촉지난다.

이 지사는 '중부내륙권 광역발전구상'을 통해서는 상주, 문경, 김천, 영주, 예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개발과 발전전략을 구사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철우 지사는 "생각의 크기가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지방정부의 능력을 증명,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건전한 비판 통해 올바른 언론 방향 제시

대구시장 홍준표

정론직필이라는 일념으로 대구경북의 언론발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구광역일보가 창간 2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일보는 창간 이래 한결같이 지 역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 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주셨으며, 건전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언론 방향 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 을 보여 주신 관계 임·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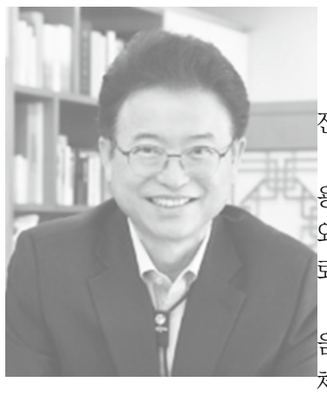
이제 대구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를 건설하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 찾기 위해 오직 250만 대구시민들과 대구 미래 50년만을 생각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구 번영을 위한 담대한 도전에 대구광역일보가 혜안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 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보도로 늘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경북도 발전과 대화합의 언론으로 거듭나길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일보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은 물론 건전한 감시와 비판, 소통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세대, 성별, 이념 갈등은 심합니다. 선진국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살률은 세계 1위,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아이가 없는 미래 대한민국은 없기에 경상북도가 선봉에 섰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국가 구조개혁과 의식 대전환입니다.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 5만 불 시대로 만들려면 인구 500만 명 단위 특화산업 기반으로 지방 곳곳을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의 다양한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핵심은 완전한 지방자치 도입입니다.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권역별 성장모델을 만들어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는 '大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발전과 대화합을 이끄는 대구광역일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발전 기대

중구청장 류규하

'강한신문'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9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론 중심 1번지 신문으로서 지방의 행복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슬기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동성로 재도약을 위한'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으며, 새로운 시설과 동성로 특유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동성로 상권의 재도약과 도심 상권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 숙원 사업인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와 구립공공도서관은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북성 공영주차장, 남산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달성

최재훈 달성군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눈과 귀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27만 군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깨어있는 언론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달성군도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라는 군정방침에 맞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상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애독자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길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언론사

영천시장 최기문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1996년 창간을 시작으로 올해 28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구경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김성용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대구광역일보는 사회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며 대구경북 중심의 사건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인터넷과 지면을 통합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쌍방향 매체를 만들며 독자와 누리꾼이 주인이 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구광역일보의 앞날에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민의대변,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주시고 더욱 살기 좋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른 시각에서 책임 있고 품격 높은 기사로 미래의 언론문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언론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올바른 정보의 산실 도약

경주시장 주낙영

'강한신문'이라는 힘찬 구호로 첫 발을 내디뎌 오랜 시간 동안 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한결 같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김성용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속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있는 비판, 그리고 사회의 소외되고 어두운 면을 어루만지는 것이 이 시대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결같이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대구광역일보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언론은 진실의 창이며 시대의 등불입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일보가 지역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대를 선도하는 올바른 정보의 산실로 힘차게 도약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반 마련 최우선

구미시장 김 장 호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하는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구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과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원칙과 신념을 갖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구광역일보에 축하와 함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광역일보는 지방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고 뉴미디어시대에 맞추어 독자가 기자가 되고 기자가 독자가 되는 진정한 쌍방향 매체를 만드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도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을 최우선에 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도시를 재창조 하는데 공직자 모두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28주년을 맞은 대구광역일보가 앞으로도 언론의 책임과 가치를 지켜나가며, 미래를 이끄는 대표 언론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Brighter tomorrow

애독자의 신뢰로 힘차게 나아가길

청도군수 김하수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청도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28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변화와 혁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인 '정론직필'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 신속한 정보 전파와 더불어 지역민의 마음을 모아 내어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언론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일보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군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치분권시대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군민들의 눈과 귀, 목소리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언론사로 나날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애독자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길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새희망 새울릉' 을 향해

울릉군수 남한권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강한신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힘차게 태동한 대구광역일보가 울릉군 같이 작은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용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와 모델을 구현해 독자의 알권리를 채워 주시는 것에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현 시대에 언론은 SNS, 각종 플랫폼, 포털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른 미디어 생태환경 변화에 생존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는 기획 보도와 전문가 의견을 늘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하여 임팩트 있게 여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대구광역일보의 자세는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언론으로 남겠다는 초심을 지켜 더욱 신뢰받는 언론사로 발전해가길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일보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울릉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섬 '독도'에 대해 유익한 소식들, 그리고 '새희망 새울릉'을 향해 나아가는 울릉군정이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언론, 격조높은 언론

청송군수 윤경희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청송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발빠른 취재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날카로운 비평과 비전으로 지역사회 이정표 역할을 담당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사라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사회를 깨우는 경책(警策)의 기능과 언제나 진실을 외치는 나팔수의 기능,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횃불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일보는 냉철한 시각과 보다 성숙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창조적 동반자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의 사랑을 받는 정론직필의 언론, 격조 높은 언론으로 굳건히 뿌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희망찬 영양건설

영양군수 오도창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구광역일보는 오랜 기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정확하고 발 빠른 정보 전달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왔으며 특유의 날카롭고 객관적인 견해로 주민들의 교양과 지식 함양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일보가 지역민의 권리를 지키고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균형 있는 시각,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현장성을 바탕으로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며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영양군은 민선 8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지혜와 용기가 더해져 값진 성과들을 이뤄냈으며, 지역 언론인들의 협조가 더해져 보다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양군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미래를 제시해 희망을 주는 언론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일보와 함께 미래로

영덕군수 김광열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수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고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맞서 대구·경북의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일수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시기라 여깁니다. 대구광역일보는 지난 28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로 지역민들의 공론을 이끌고 지자체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대구광역일보의 정신과 가치를 함께 하며, 언제나 군민 곁에서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덕군민을 대표해 대구광역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 잘 사는 경상북도, 다시 한번 강력한 대구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광역일보와 함께 손잡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

예천군수 김학동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5만 6천 예천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일보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올바르고 건설적인 논평과 특색있는 기획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날카로운 정책제언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대구광역 일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일보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예천군은 변화와 혁신, 도전의 기치 아래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건설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 여론의 형성은 합리적인 비평과 발전적인 대안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광역일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론직필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구광역일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령의 새로운 미래 군민과 함께

고령군수 이남철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을 펼치며 지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지역 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주신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참 언론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시는 손경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일보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도의 중심에 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민과 독자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제공하고 믿음직한 정보를 전달하며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28주년을 맞은 대구광역일보가 한번 더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밀착형 언론 역할 기대

칠곡군수 김재욱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칠곡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지방언론의 선두에서 대구경북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성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지방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순수 지방지인 대구광역일보는 대구경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대구·경북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 밀착형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지역 언론의 존재는 지역민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깊이 있는 보도와 건설적 대안 제시로 칠곡군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젊고 건강한 신문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칠곡군은 'eco 칠곡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도시 칠곡'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귀사와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창간 28주년 기획섹션

대구·경북 광역·기초 후반기 의장단 출범

대구 광역 기초 의장단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

동구의회 노남옥 부의장

서구의회 정영수 의장

서구의회 이금태 부의장

남구의회 송민선 의장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

북구의회 장영철 부의장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중구의회 김효린 부의장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장

달서구의회 정창근 부의장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장

달성군의회 김보경 부의장

경북 광역 기초 의장단

박성만 도의회 의장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

경산시의회 이동욱 부의장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경주시의회 임 활 부의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시의회 양진오 부의장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

문경시의회 진후진 부의장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상주시의회 박주형 부의장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영주시의회 김병기 의장

영주시의회 이상근 부의장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장

영천시의회 김종욱 부의장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포항시의회 백인규 부의장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

고령군의회 유희순 부의장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봉화군의회 금윤동 부의장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

성주군의회 이화숙 부의장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영덕군의회 배재현 부의장

영양군의회 김영범 의장

영양군의회 우승원 부의장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

예천군의회 박재길 부의장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

울릉군의회 한종인 부의장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

울진군의회 임동인 부의장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

의성군의회 지무진 부의장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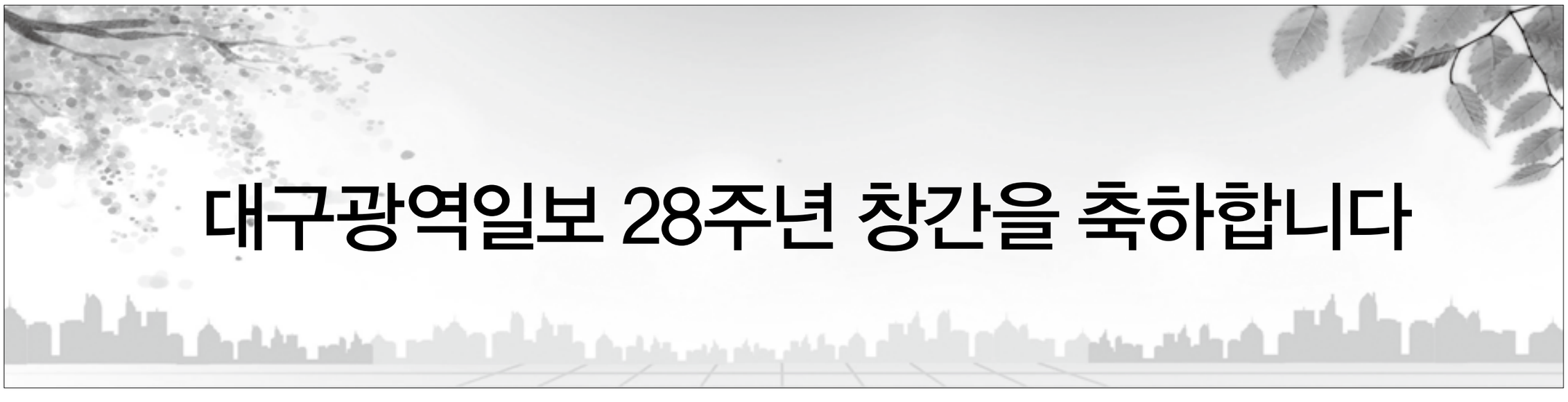
청도군의회 박성곤 부의장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

청송군 윤영경 부의장

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장

칠곡군의회 배성도 부의장



임종식,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가 함께 여는 미래 라는 새로운 시공간 건설

민선5기 대한민국교육 표준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 되겠다 절대약속 임 교육감 풀어야 할 최대과제 학생 수 급감

교육은 흔히 백년 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이 말에는 국가가 국민 교육에 책무감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경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18대 임종식 경북교육감.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성과와 함께 향후 2년의 경북교육의 방향을 내놨다. 경북교육의 세 가지 지표는△성장하는 나(ME) △조화로운 우리(WE)'가 두 축으로 만나 △함께 여는 미래 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만든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바라는 경북교육의 꿈은 "세계교육 표준 꿈이 현실로"이다.

임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으로 민선 4기에는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만든다. 민선 5기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과제 학생 수 급감

임 교육감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학생 수 급감이다.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각급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경북지역 초등학교는 24교이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 죽장초상옥분교장 △포항 장기초모포분교장 △김천 구성초, 김천 지례초 △김천 지례초부항분교장 △안동 임동초, 안동 은혜초 △안동 월곡초삼계 분교장 △안동 녹전초원천분교장 △영주 평온초 △영천 지곡초 △영천 평천초 △영천 중앙초화남분교장 △상주 외남초 △상주 화북초입석분교장 △상주 화북초용화분교장 △문경 농암초청화분교장 △의성 춘산초, 청송 부남초 △영양 영양중앙초 △영양 일월초청기분교장 △청도 유천초 △성주 용암초 △봉화 법전중앙초 △울진 월송·삼근·후포동부초 △울진 부구초삼당분교장이다.

최근 5년간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경북지역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22개교, 2021년 23교, 2022년 31교, 2023년 32교이다.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경북지역 중학교는 포항 송라중, 고령 우곡중 2교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20년 24교, 2021년 30교, 2022년 24교, 2023년 30교였다.

신입생을 1명만 받은 경북지역 중학교는 5교로, 포항 서포중, 경주 산내중, 영천 청통중, 청송 구천중, 영양 수비중학교다.

2020년 1교, 2021년 2교, 2022년 2교, 2023년 1교였다.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모든 학교에 늘봄행정실무사를 배치(476명)하고 내년에는 임기제 늘봄지원실장(162명)도 배치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를 학급당 10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

임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구체화 돼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조화로울 것이며 경북교육은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학교 운영

경북교육청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도심이나 읍 외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학교의 학생들이 별도의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일방향 학급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 경북에는 179교에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에 통학하는 유입 학생들을 위한 통학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의 소규모 초중학교를 연계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을 비롯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인증제' '도농 어울림 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교육 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당국이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속도를 따라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

2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구호는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화돼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경북·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경북교육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 사실을 입증했다. 때문에 임 교육감은 민선 5기 후반기 교육 목표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10곳 체험기관과 7개 공공도서관, 국제교육원을 건립한다.

미국과 독일, 베트남 등 3개국 한국교육원에 인력을 파견, 세계교육 표준을 구체화한다.

그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등 경북교육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해외 우수학생 유치 정책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초등생 선행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선행교육에 대해 "무리한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간혹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설명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내년 3월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단위 학교의 미개설 과목을 지원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개교를 약속했다. 해외 우수학생 유치 정책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직업계고에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입학해 잘 적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8개 직업계고에 4개국 66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화형비자로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학부모 동반 비자도 검토 중이다"며 "부산, 전남, 경남, 강원 교육청과 협력해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놓았다.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급격하게 줄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인 탓이다.

임 교육감은 "내년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초등교사는 88명, 중등교사는 204명 감축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경북형 인성교육

임 교육감은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를 올해도 영덕과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 운동길 걷기를 계승,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학교급별, 테마별, 지역별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나라사랑 교육의 하나인 사이버독도학교는 현재 누적 이용자 150만 명, 수료자는 1만8000여 명으로 전국·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쌍방향 사이버독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현한다. 천인음악제와 도전체력인증 한마당의 예술체육교육으로 협동심과 배려, 소통을 배우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학생들이 주 5일, 1회 60분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매일운동 '미래열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아침 운동을 더욱 확대한다.

감사송 제작, 공모전 등 '함께해요, 감사운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고 감사 나누기 실천을 확산한다.

인생의 특별한 경험, 정보, 지식을 나눠 줄 사람책을 대출해 주는 신개념 인생도서관을 개관,

교육기부를 활성한다.

▣기초, 기본 학력 보장 향상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라고 밝혔다. 수업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고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질문, 궁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퇴계 선생의 교육관을 계승한 10개 교사단, 225명으로 구성된 '신(新) 퇴계 교사단'이 수업나눔 이어가기 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생 질문·탐구 궁금한마당, 고교생 질문·탐구 궁리한마당, 초·중등 통합 경북수업나눔 축제를 열어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현한다.

수능 대비를 위해 국어, 수학 교과의 수능형 평가 문항을 자체 개발, 8,10월, 2회 모의평가 형태로 실시, 해설 강의 등을 제공,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

내년 3월, 농어촌 소규모학교 및 단위 학교의 미개설 과목을 지원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개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력 향상에 힘쓴다.

▣세계교육 표준 창출

아이들이 살아갈 시간은 미래이며, 무대는 세계이다.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

임 교육감이 늘 하는 말이다. 그는 세계교육 표준 창출을 위해 IB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지난 5월 3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에는 IB 본부와 도입 시도교육청 간 협력각서를 체결, IB 전문가 양성과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등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기관을 적극 구축한다. 2025년 3월 수학문화관 개관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교육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9개 기관과 영덕, 칠곡 등의 7개 공공도서관의 신축, 건립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께서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교육을 총괄할 국제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공모한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미국, 독일, 베트남 3개국의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경북의 직업계고에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입학, 한국 학교생활에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다.

내년에는 8개교 직업계고에서 4개국 66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특화형비자로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학부모 동반 비자도 검토 중이다.

조만간 관심 있는 부산, 전남, 경남, 강원교육청과 업무협약으로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과테말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에티오피아 4개국에 R(재생)컴퓨터 나눔과 현지 교원 정보화 연수를 지원, 세계에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실천한다.

김성용 기자

자살 행렬… 벼랑끝 살인 사회 뿌리째 흔들어

2022 대한민국 1만2906명 자살
하루평균 35.4명 2시간마다 3명
자살로 삶을 마감….사회적 타살

자살 행렬이 꼬리를 물고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일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면서 자살이 마치 사회적 신드롬이나 유행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다.

2022년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1만2906명(25.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5.4명, 즉,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셈이다.

성별 자살률은 남성(35.3명)이 여성(15.1명)보다 2.3배 높다.

전년 대비 자살률은 남자(-1.7%), 여자(-6.4%) 모두 감소했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40대(2.5%), 10대(0.6%) 순으로 증가했다.

70대(-9.6%), 20대(-9.2%), 30대(-7.2%), 60대(-4.7%), 50대(-3.6%), 80세 이상(-1.1%) 순으로 감소했다.

때문에 비관형 자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문보기가 두렵다는 시민들의 목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벼랑끝 살인이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셈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세상을 등지고, 외로움에 지쳐 목숨을 끊고, 결혼 못해, 삶이 고달파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 후 극약을 먹고 죽는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시험을 잘보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해 나홀로 구들장을 지고 있는게 싫어서, 카드빚, 부모의 꾸지람, 애인 변심 등 갖가지 이유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자살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죽이는 사건도 의외로 많다.

사람들도 '자살'이라는 극단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자살도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1위를 고수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에 달한다.

노인빈곤자살률, 장애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자살률은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무원 자살 잇따라

공무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우울증과 자살로 내모는 주요 원인으로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꼽혔다.

올해 3월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의 컴퓨터에서는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다수 확인되며 파장이 일었다.

지난 5월 강북구 보건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1일 분석한 '2022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1만 명당 요양자 수 기준으로는 2.14명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질환 요양 관련 산업재해(0.19)보다 약 11배 많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의 자살 등 사망은 22명,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0.02명)보다 약 9배 높았다.

공무원 중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와 사망자도 각각 111명, 43명이나 됐다. 1만 명당 비율 역시 각각 0.86명, 0.34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3.6배, 1.4배 많았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관련 요양과 사망이 많은 것은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은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과 핵심 추진 과제를 담는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이달 중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초·중·고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는 제한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교육부는 또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선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 자살예방 교육' 온라인 허용…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지자체, 초중고,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안 학교가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졌다.

온라인 교육 허용으로 대면 교육 위축 우려도 제기돼 자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가 실제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최근 자살 연령이 낮아지면서 자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정부의 온라인 교육 허용은 이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자살한 초·중·고생은 193명으로 2018년(144명)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 급증했다.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자살 예방 활동가들은 "강사용 대면 교육 교재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 허용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대면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주선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생명문화라이프호프 사무국장은 "정부가 온라인 자살 예방 교육을 승인한 것은 자살 예방 교육을 민방위 교육과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환경보호 캠페인도 아니고 아이들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인데, 동영상을 틀어 놓고 들으라고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수강자가 듣지 않으면 일방 통행으로 흐르기 쉽다.

현장 교육처럼 궁금한 점을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없다.

김 사무국장은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온라인 동영상을 접한 후 궁금증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후 발생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주간이 있긴 하지만 담임 교사가 자료를 소화해 수업하는 수준"이라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흡연·마약 예방 교육처럼 외부의 전문 강사가 투입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 대상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대안 학교가 빠진 것도 자살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살 예방 교육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대면 교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는 "자살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강사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 후 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으려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예산은 올해 31억 원으로 지난 2021년(48억 원)에 비해 17억 줄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은 지난해 488억 원에서 올해 508억 원으로 늘었지만,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자립준비청년…47% "자살 생각 해봤다"

자립준비청년 절반 가까이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비중도 18.3%로 높았다.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들었다. 최근 1년 간 질병을 경험한 자립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경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교육·고용 등 자립 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 조사로 2023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8개 영역별 문항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으로 2020년(5.3점)보다 높아졌다. 다만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본인의 자립상태에 대한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경제적 자립 6.1점, 심리 정서적 자립 6.6점, 사회적 자립 6.6점을 꼽았다. 모든 영역에서 2020년보다 점수가 높아졌다.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2020년(50%)보다는 3.5%포인트(p) 줄었지만,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심각한 자살 생각' 항목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18.3%가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가 뒤따랐다.

2020년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지난해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바뀌었다.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30.3%)를 1순위로 꼽았다.

운동·취미 등 지원(24.7%), 심리상담 지원(11.0), 정신과 치료 지원(9.6%) 순이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마다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체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 상담을 하고 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건강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비, 생활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5032명 중 51.9%가 여성 48.1%가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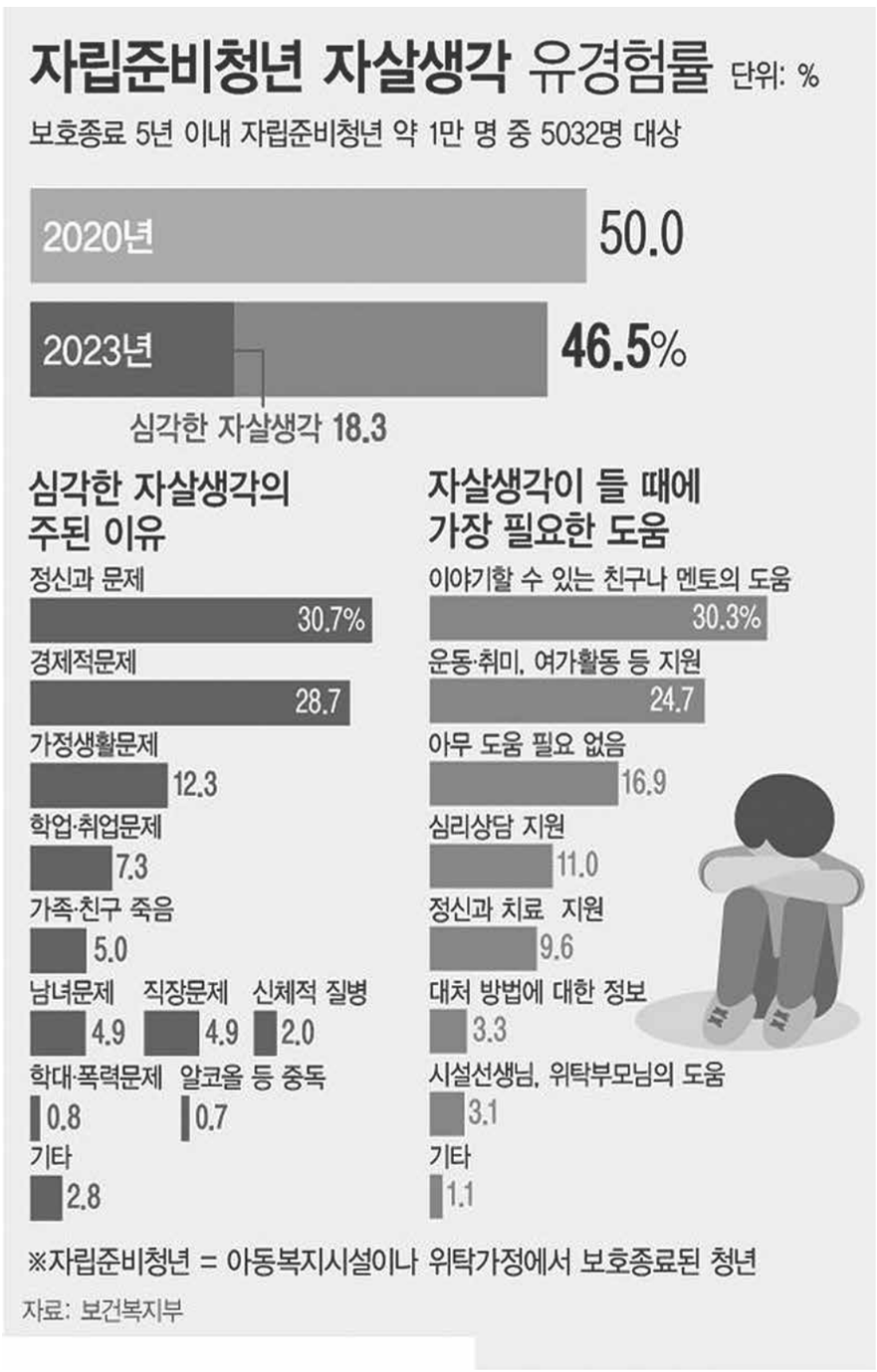
보호유형으로는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았다.

시설 보호유형인 아동양육시설은 31%,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조미경 기자

대구 9년새 5271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

대구시민 하루 1.8명 꼴 자살
남구 자살률 4년간 1위 멍에
중구 달성 자살률 가장 낮아
우리복지연합, 대구시 시민 죽어가는데 생명 살리기보다 신천프로포즈존 110억 투입…
대구시 2024년 자살예방 예산 28억 4000만원…턱없이 부족



대구시민 하루 1.8명 꼴 자살한다.

이 사실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지역 자살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확인됐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6배(2016)~9.4배(2022)나 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3.6배(2020)~9.3배(2022)로 월등히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해 100명 이하로 줄었지만, 자살 사망자는 한해 600여 명을 유지한다.

2022년 대구의 자살률(27.0)은 전국 평균(25.2)보다 높다.

자살 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구·군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구·군은 자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때문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기회에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례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가 아니라 예산, 인력, 사업 실효성 등을 종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실질적으로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살과 교통사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과 타인의 가족들에게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준다는게 이유다.

자살은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 일반적 사망보다 극심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1위가 자살이고 40대와 50대에서 2위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 자살자 수는 여전히 6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

대구 자살자 수는 △2016년 596명 △2017년 613명 △2018년 656명 △2019년 698명 △2020년 629명 △2021년 628명 △2022년 638명 △2023년 잠정치 647명 △2024년 1분기에만 166명이 숨졌다.

9년새 5271명이 세상을 등졌다.

자살은 교통사고보다 △2016년 3.6배 △2017년 4.1배 △2018년 5.5배 △2019년 6.2배 △2020년 5.6배 △2021년 7.5배 △2022년 9.4배 △2023년 7.5배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거의 같다.

대구는 2016년 전국 평균보다 자살률이 낮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2년 대구 자살률 27.0명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27.3) 다음으로 높다.

17개 시·도 중 충남(33.2), 강원(33.1), 충북(29.0), 부산(27.3)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높다.

2019~2022년까지 구군 자살률 현황을 보면 △남구는 4년 내내 1위이다.

다음으로 서구와 동구가 높다.

반면 중구는 32.5명에서 18.3명으로 무려 14.2명을 낮추어 달성군과 함께 가장 낮은 자살률을 나타냈다.

수성구는 2021년 대비 무려 6.1명이 늘어 2022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일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교통사고·범죄·생활 안전 분야에서 각각 3등급, 화재와 자살은 개선이 요구되는 4등급, 감염병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분석한 결과로, 광역시·도와 시·군·구 비교 그룹 내에서 1~5등급(낮을수록 안전)으로 평가했다.

대구는 전반적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구·군간 편차도 매우 컸다.

서구는 범죄·생활 안전·자살 3개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권(5등급)을 기록했다.

중구(화재·범죄)와 남구(자살·감염병)도 각각 2개 지표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았다.

달성군은 교통·화재·생활 안전 분야에서 각각 최고 등급(1등급)과 자살·감염병도 우수에 해당하는 성적(2등급)을 받아 대조적이었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1~3월 자살 사망자의 증가추세가 심각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지난달 14일 열열었다.

전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2021년 1만3352명에서 2022년 1만2906명으로 줄었다.

2023년 잠정치가 13,77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 잠정치는 33.8% 증가한 1321명, 2월은 11.6% 증가하는 1185명, 3월은 1.7% 증가한 1,288명이라고 밝혔다.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 같은 자살 잠정치는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살 잠정치는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 취합해 발표하는 자료로 최종 결과와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지난 정부부터 제도화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 예방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정책을 재점검, 분석해 최우선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이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민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살리기보다 신천프로포즈존을 만든다며 110억을 투입 한다.

자살은 40대와 50대에서 사망률 2위, 60대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위중한 사회문제다.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자살문제를 외면했다면, 이제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자살 예방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대구시도 시정의 핵심과제로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구시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몽운동을 벌여 성과를 낸 것처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몇 배 이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편성한 연도별 자살예방 예산(국비 포함)은 △2021년 19억 2000만 원 △2022년 22억 8000만 원 △2023년 26억 △2024년 28억 4000만 원이다.

매년 조금씩 증가했지만, 자살예방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는 뜬금없이 출산률 저하를 막겠다며 설치하려는 신천프로포즈존 설치 예산과 같은 토건 예산을 자살예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자살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구·군의 책임은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본 적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대구시와 구·군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데, 프로포즈존을 만든다며 논쟁할 시간조차도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2023년 잠정치로 보면, 하루에 1.8명(2022년 1.7명)의 대구시민이 자살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4년 1분기에 한국은 3794명이 자살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이 중 10~30대가 25.1%, 40~50대가 42.9%를 차지했다.

국가위기이자 지역위기가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구·군은 너무나 한가하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총고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민이 하루 1.8명 자살한다는 것은 대구라는 공동체가 붕괴되는 적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인구절벽, 지역소멸 이런 위기의 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적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구시와 구·군의 지자체장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22년 통계를 봐도 대구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27.0명이라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남구 36.8명 △서구 34.8명 △동구 33.1명 △달서구 28.0명이다.

남구는 지속적으로 대구에서 자살률이 가능 높은 지역이다.

수성구는 전년 대비 무려 6.1명이나 증가했다.

은 사무처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불안 증가, 돌봄의 한계 등을 찾아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미경 기자

대한민국 실업자 수 85만 7000명… 오늘도 거리 헤매

벼랑 '끝' 내몰린 실직·노숙자
직업없이 떠돌아 마음을씨년
대구 취업자 전년 동기 보다
5만3000명, 경북 3000명 감소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맨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노인, 주부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장 주위를 봐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퇴직자 주부, 노인구직자 등 구직 희망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탓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실직자, 노숙자, 직업 없이 떠도는 가장들의 마음은 을씨년스럽다.

코로나 19 여진이 아직도 강타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최저임금마저 마저 1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경기불황이 청년들을 내몰고, 중소기업은 임금비가 무서워 사람 구하기가 겁이 날지경이다.

최종학교를 졸업을 한 뒤 직장에 취업했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꾸준하게 이뤄지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밑돌아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20대 취업자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계속됐다.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을 이어갔으나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고 고령층 쉬었음 인구는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9000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6%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9000명(0.2%) 늘어난 449만7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만명(2.5%)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3만3000명(-2.0%)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과 같은 수준인 69.9%로 집계됐다.

지난달 실업자는 8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는 1999년 이후 6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1000명(0.1%) 증가했다.

▣대구 취업자, 전년 동기 5만3000명 감소

6월 대구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고용률은 하락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6월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2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만3000명(4.2%) 감소했다.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월에 비해 3.2% 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3.3%p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6000명), 제조업(1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1000명), 건설업(4000명), 전기·운수·창고·금융업(3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1.9%), 임시근로자는 3만2000명(14.4%), 일용근로자는 1만3000명(19.8%)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8000명(3%)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000명(4.8%)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9시간으로 0.3시간(0.8%)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명(24.5%)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

대구시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2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4000명(3.4%)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한다.

▣경북 고용률 65.3%…상승

6월 경북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며 65.3%다.

이 사실은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6월 경북도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취업자는 14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00명(0.2%)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3%로 전년 동월대비 0.7% 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6%p 오른 69.6%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5000명), 건설업(6000명)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만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8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2만9000명(13.6%)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만명(1.6%), 일용근로자는 4000명(7.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동일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7000명(12.4%) 줄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며 2.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8.9%) 감소했다.

경북도 15세 이상 인구는 22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1.2%)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5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4%)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7%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한다.

황태용 기자

전국은 지금 실업대란이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올해 청년 미취업자 통계 수치는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의 아픔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세

최근 발표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가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만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청년층 중에서 25~29세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면서 숙박·음식업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비를 버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조사에선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50.5%, 47.6%로 전년동월대비 1.0%, 0.2% 하락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의 재학 중 직장체험과 졸업 후 직장취업 경험, 직업교육·훈련 경험 등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취업경험 횟수 및 계약직과 시간제 비중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0만명대를 기록한 증가폭이 5월 8만명을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올라서지 못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 이후 4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4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4월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5월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하락해 8만명에 그쳤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 반등을 이뤄냈지만 다시 하락해 5월과 6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32만8000명, 70세 이상 14만3000명, 75세 이상 7만5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 10만6000명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에 '사형선고', 철회해야"

노동계, 일제히 "물가상승률 고려 사실상 임금삭감" 반발
자영업자, 장사 접어야 할 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이미 한계사항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0%(460), 올해 2.5%(240)원 올랐다.

노동계는 일제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카페·치킨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업급여도 오른다.

건설업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지만, 청년층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져 인력난이 허덕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계, 물가 고려하면 삭감

노동계는 일제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전 각각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는 9.1%였는데, 이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차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이에 노사가 공익위원의 역할을 촉구하며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구해 나온 구간이 '1.4%~4.4% 인상'이었다.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구간의 중간인 2.9%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겨우 1.7%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돌이킬 방법은 없지만,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과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민주노총도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최근 2년 간의 물가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이번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든 말든 관심조차 없던 사용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에 있다"며 "처음엔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차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임금 수준 논의에서는 동결을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임위 결정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이번 회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일제히 비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계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불 주체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은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때문에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같은날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1만원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장사 접어야 할 판…한숨

외식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식재료와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에 이어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탓이다.

지난해 부터 계속된 채소값 상승에 더해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 소식이 더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판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지만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9천원대와 1만원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최저시급이 8400원일 때부터 주휴수당(시급의 약 20%)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이미 1만원이었던 셈"이라며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절대 동결하거나 내리지 않고 올리기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업급여도 '쑥' 오른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최임위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른 관련 지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2년 1만7900원가량이다.

영국의 경우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이 1만8500원이다.

프랑스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1만6800원 수준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2023년 기준 7450원, 일본이 8300원 가량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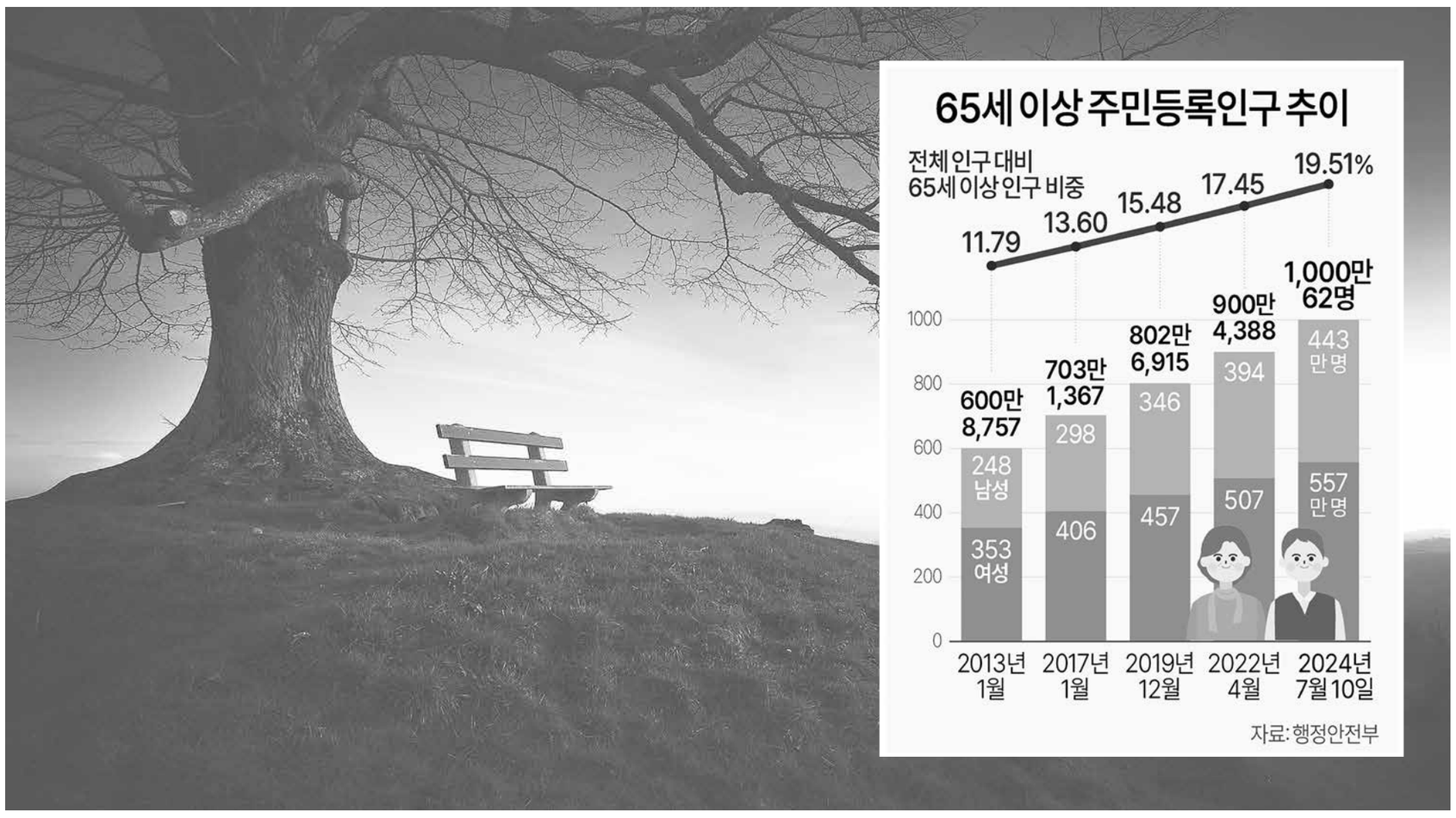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조여은 기자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노인

65세이상, 전체인구 19.51%
남성 443만명 · 여성 557만명
대구 · 경북 이미 초고령사회
대구 고령인구 47만9651명
경북 고령인구 64만4778명



대한민국이 늙어가고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출생률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전반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고독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7.2%)과 2018년(14.3%) 각각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기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 전반기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올해 말로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거주를 중심으로 인구를 산출하는 통계청 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등록 기준보다 그 진입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행안부 자료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거주자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2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다.

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다.

부산이 충청·경남보다 65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화양상이 도시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빠르게 늙어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까지 치솟을 전망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노령화 지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들을 분석하며 대응 방법들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첫 번째로는 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다.

의학 기술 발달 및 건강 증진 덕분에 인간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 도래와도 연관지을 수 있다.

1955~1963년생인 이들은 약 1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 인구 집단이다.

노령화지수 급증 시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 복지 비용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이 꼽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수도 2020년 22.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미래가 걱정되는 시점이다.

대응책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정년 연장 및 폐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수용 등이 거론되지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구 · 경북 사실상 초고령사회

대구·경북은 이미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지자체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고령인구는 47만9651명(20.26%), 경북은 64만4천778명(25.35%)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별·광역시 중 대구는 부산(23.28%) 다음으로, 경북은 전남(26.67%) 다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다.

2022년 경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도민 중 23%를 차지했다.

노인 4명 중 1명은 홀로 산다.

경북도는 지난해 통계청과 협업 개발한 경북도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경북도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2022년 경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62만3373명 중 60만3321명으로 23.0%를 차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 노인 인구는 포항(9만8382명)·경주(6만140명)·경산시(4만9805명) 순으로 많고 울릉(2267명)과 영양(6163명)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 비율은 여성 34만3819명(57.0%)으로 남성 25만9502명(4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홀몸노인은 15만2660명으로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했다.

노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폐렴 뇌혈관질환 폐암이 주요 원인이다.

2022년 하반기 노인인구 취업자는 30만5000명으로 고용률 50.4%이다.

노인 사업자등록 인원은 8만238명이며 부동산업이 2만3731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6만2602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46만7408명이다.

노인복지시설은 9383곳이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명당 복지시설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2년 15.6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8만 583명이다.

만성질환은 치주질환(24만409명) 고혈압(22만7292명) 관절염(20만1131명) 순이다.

주요 암은 위암(6254명) 폐암(5483명) 대장암(5343명) 순으로 진료 인원이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28일 통계청과 협업해 개발한 경북도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도 누리집(www.gb.go.kr)에 처음 공표했다.

노인등록통계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개발됐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분야 6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이번 통계는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주택소유통계 등의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로 작성한다.

▣70대 이상 인구, 20대 인구 사상 첫 추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7486명보다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평균 수명 증가가 맞물리면서 '늙어가는 한국'의 실상이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연령대는 50대(869만5699명)였다.

50대 인구는 전체 연령대에서 16.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792만 명, 15.44%), 60대(763만 명, 14.87%), 30대(658만 명, 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었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대 이하 연령대가 성인이 되어갈 때 고령자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 확실시 된다.

2014년만 해도 10대 인구는 60대, 70대 이상보다 많았으나 이제는 10대 미만 다음으로 비중이 작아졌다.

인구를 크게 중년인 40대를 중심으로 나눠 보면, 40대 이하(2867만9520명)는 전년(2934만1647명)에 비해 66만2127명(-2.26%) 줄어들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2264만5809명으로 집계돼, 전년(2209만7391명)보다 54만8418명(2.48%)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1411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만3121명(5.00%)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로,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됐다(14.21%).

지역별로 보면 이미 17개 시도 중 전남(26.10%), 경북(24.68%), 전북(24.11%), 강원(23.99%), 부산(22.63%), 충남(21.34%), 충북(20.85%), 경남(20.60%) 등 8곳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대구(19.64%), 서울(18.47%), 제주(17.94%), 대전(16.97%), 인천(16.58%), 광주(16.48%), 울산(15.92%), 경기(15.57%) 등 8곳은 고령사회였다.

세종(11.01%) 단 1곳이 유일하게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였다.

226개 시군구별로 고령 현황을 보면, 75개 시 지역 중 8곳(10.67%)이 고령화사회, 32곳(42.67%)이 고령사회, 35곳(46.67%)이 초고령사회였다.

군 지역 82개 가운데 고령사회는 5곳(6.10%)이었다. 나머지 77곳(93.90%)이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지역 사회를 뒤흔드는 배경이다.

구 지역 69개 가운데는 5곳(7.25%)이 고령화사회였다.

36곳(52.17%)은 고령사회, 28곳(40.58%)은 초고령사회였다.

인구 감소세에 반해 세대수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 세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5만 세대(19.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83만 세대, 18.44%), 30대(168만 세대, 16.87%), 50대(163만 세대, 16.45%), 20대(151만 세대, 15.25%), 40대(128만 세대, 12.93%), 10대 이하(4만 세대, 0.41%) 순이었다.

▣초고령사회 제대로 준비돼 있나

국내 고령인구는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가속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걸맞은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생 양상에 더해 이런 고령화 양상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를 예고한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국가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증가 등 사회 보장·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도 시급해진다.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 바 있다.

이미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감당할 수준을 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인구 문제는 OECD가 이날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정책 권고 사항에도 포함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노동·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론 연공급 위주 임금 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내 노인이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기대수명도 2022년 기준 82.7세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65세 이상이라는 노인의 정의를 이젠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대구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중년 1인 가구와 2023년도 미조사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생애주기별·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조사 대상은 대구시 거주 중년(40~49세) 1인 가구 및 지난해 부재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 등 총 7만2000여 가구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구·군별로 구성된 '즐거운생활지원단(이하 즐생단)'을 주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크대구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즐생단'은 대구시,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영남이공대학교의 협업으로 올해 1월 발족한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및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활동하는 인적 안정망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확보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작년 성인 독서율 43.0%… 김천시 독서문화 확산

10명중 약 6명 1년간 책 無
20년 전통 김천시립도서관
양질 정보제공 수요자 요구
새 '문화예술공간' …발돋움
경주·칠곡 여름독서실 운영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다.

10명 중 약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는다.

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때문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우리나라 성인 중 과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2028까지 성인 독서율을 지난해 43.0%에서 50.0%로, 연간 독서량을 지난해 3.9권에서 7.5권으로 높인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생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지난 4월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다.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이다.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다.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다.

연간종합독서량은지난 1년간읽거나들은일반도서의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이다.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32.3%로 '2021년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그리고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였고 이어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였다.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다.

2019, 20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답했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한 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김천시 독서문화 확산

김천시가 독서문화를 확산 시킨다.

김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여가는 물론 취미·학습을 지원하는 복합문화센터이자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통해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 새로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시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책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개관 20주년을 기념, 다양한 특별행사를 열었다.

'書로서로 통하는 어울마당' 북페스티벌 행사다.

그림책 입체낭독극, 동화콘서트, 체험·나눔 행사, 전시회 등 독서문화축제의 장을 마련,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책 읽는 독서진흥

올해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겨울방학 시즌 'hot한 도서관, 문화예술 체험 방학특강'을 운영했다.

2009년부터 운영,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독서마라톤대회'도 2월부터 하고 있다.

도서관과 북스타트코리아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인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은 인기다.

김천에 주소를 둔 22년생 유아에게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과 독서용품을 선물했다.

도서관 소장도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트렌드를 반영한 북큐레이션 행사인 '주제별 소장도서 전시회'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이용교육과 함께 그림책 활용놀이를 제공하는 독서체험 프로그램인 '사서(司書)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는 지역아동기관이나 복지기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사서와 독서전문가의 책놀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인문학·교양 충족부터 삶

도서관을 찾는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위해 힐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취미 강좌도 진행된다.

먼저 책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중문학 작가인 이슬아·김용섭 작가의 '초청강연회'를 연다.

인문학의 가치를 경험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 시민들에게 지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사랑방 은빛도서관'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실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에게 책을 매개로 한 문화·여가 활동을 운영,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노년의 삶에 행복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부모와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임산부와 영아(12개월 이하) 양육자를 대상으로 무료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맘(MOM)편한 도서택배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책나래'도 함께 운영한다.

예비·육아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취미생활 강좌인 태교·육아 힐링강좌,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소통법 등을 알려주는'부모교육 강좌'도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학습 동기부여를 돕기 위한 '토닥토닥 성장캠프', 관내 공공기관과 협력한 '우리 동네 진로 탐험', 그림책 작가의 공연을 관람한다.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책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 독서와 인문학의 현장 탐방을 연계한 '시끌벅적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인형극·마술 퍼포먼스 등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공연'도 연중 운영된다.

▣삶의 원동력 도서관

은퇴후 세대 또는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토론형 인문 프로그램 '아름다운 신중년 컬리지'는 올해 신설됐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상반기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하반기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장년층에게 인문심화 강좌와 체험과 현장탐방을 연계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서관 창작 공작소'도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도서관 창작 공작소'는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문학·공예·미술 등 분야별 창작 워크숍을 운영,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동기 부여와 함께 성취감,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콘텐츠 창작과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자 연말에는 창작 공작소 전시회를 연다.

▣시민 book돋움

시립·율곡·작은도서관(9곳)은 이용자 중심의 최신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지역 문화생활 거점 역할을 한다.

총 장서 47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시의 공공도서관은 올해도 2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 100여 종의 정기간행물(잡지, 신문 등)을 각 도서관에 비치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자료 900종(오디오북, 전자책 등), 210종의 전자잡지와 DBPia에서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웨이브온 실시간 VOD 서비스 등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김천시의 공공도서관 11곳(본관, 율곡, 작은도서관 9곳)을 연계, 도서관 투어와 지역 특성을 살린 미션을 수행하는 '도서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참여자들은 책과 함께 여행하듯 우리 동네 구석구석의 도서관을 방문,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독서공간과 독서경험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시립도서관은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립 율곡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김천시민들의 독서량과 도서관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고 풍성한 가치를 더해줄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천시는 20년의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열어갈 시립도서관은 올해에도 양질의 정보 제공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한다.

▣경주 칠곡 여름독서실 운영

경주시립도서관은 2024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생 3·4학년 대상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새달 6~8일까지 총 3일간 시립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여름 독서교실은 '도서관에서 떠나는 지구여행'이라는 주제로 지구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한다.

독서교실에서는 △지구의 역사 △우리의 지구 – 함께 살아가요 △바다가 아파요 등 지구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독서교실을 통해 도서관 이용법 및 예절을 학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구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공유된다.

여름 독서교실의 일정이 끝나면 교육 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6명에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1명), 경주시립도서관장상(5명)을 수여한다.

여름독서교실은 '경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신청'란을 통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24명) 신청할 수 있다.

이경환 경주시립도서관장은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여름 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얻고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군립도서관도 새달 5~ 8일 까지 4일간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드림 어드벤처: 직업 탐험대 출동!'이라는 주제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희망과 진로에 대해 개념을 확실히 하여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여름독서교실은 진로 직업 탐구를 주제로 하여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장래희망에 한 발 짝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알아보자 △아침 독서 탐험 △책의 모험가, 사서 △직업 탐험대 출발! △시간 여행! 과거와 미래의 직업 △탐험의 마지막! 나의 꿈 등이 있다.

여름독서교실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15~28일까지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chilgok.go.kr)에서 신청하거나 칠곡군립도서관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 또는 도서관 사무실(979-6701)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조미경 기자
이경호 기자

민선 8기 2주년 달성군, "군민이 빛나는 달성" 순항 중

교육·복지 행정부터 기회발전
특구 등 산업 동력 뒷받침까지
법정문화도시 사업과 교도소
이전 등 달라지는 지역 풍경

민선 8기 달성군의 시작은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전국 최연소 단체장 군수와 평균연령 42세의 젊은 인구가 어우러진 달성군이기 때문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년 동안 복지에서 산업까지, 교육에서 문화까지 군민이 빛나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 결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군민 만족도 87.8%를 기록해 '군민이 빛나는 젊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달성' 비전 실현에 최재훈 호(號)는 순항 중이다.

▣ 교육사업 전문성 높여

달성군은 군민에게 필요한 참신한 교육·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은'최초', '최대'라는 수식어로 가득하다.

△달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작해 관내 어린이집 172곳에 주 2~3회 놀이와 체험을 접목한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과감한 시도도 있었다.

올해 초 초등 영어 방학캠프를 통해 지역 초등학생 50명을 필리핀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해외 어학연수·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올 여름에는 필리핀에서 진행한다.

또 중등 영어 여름방학 캠프로 관내 중학생 30여 명이 다음 달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난다.

이 사업은 달성교육재단이 담당한다.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학군, 대입 등과 관련한 인구 유출을 줄이는 것이 달성군의 청사진이다.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달성군을 포함한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하며, 200억 원 예산 혜택도 주어진다.

달성군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대구시 구·군 최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다. 총 3곳에서 전면 운영 중이다.

또 지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17곳이 개원했고,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가미했다.

전입인구와 신생아에게 선물꾸러미를 제공하는'달성보따리'와 산후조리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음악회'산모 힐링 음악회'등 이색 사업, 출산축하금 지급,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등 혜택도 군민의 삶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초 전국 82개 군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복지사업의 끝없는 발전… 1인가구 대책부터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달성군은 다양한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혜택**이다. 군은 유가읍'행복한 병원' 24시간 응급실을 열었다.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이동건강버스'달성건강빵빵이'는 지역 곳곳을 방문해 벌써 100건 이상의 순회를 마쳤다.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의 안전도 고려했다.

스마트폰 달성안심서비스앱 무료 배포다.

앱을 설치한 1인가구, 거동불편자 등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미리 등록된 다수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건강음료지원사업' 등으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년층의 삶의 질도 챙긴다.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군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3억3천만 원을 편성해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특히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중 달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월 17만 원씩 100여 명에게 지급 중이다.

일상에서 호국보훈 분위기를 고취하기위해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면을 설치해 이들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 달성… "대구 미래먹거리 책임진다"

최근 달성군은 대구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청에 나선 대구시의 기회발전특구에는 교육청 등 19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고,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달성군은 사업 대상지의 주거, 교육, 문화체육, 공원녹지 인프라 확충과 기반시설(SOC) 지원 계획도 수립해'기업 하기 좋은 달성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또 달성군은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주요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2032년 하빈면에 새롭게 터를 잡는다.

△아낌없는 행정지원

기존의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술 이전료 지원 및 이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기업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사업으로 미래모빌리티·로봇·기계부품· 의료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대구시 구·군 최초로 중장년 고용 관련 참여 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는 '4050+ 경력형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민이 함께 문화도시 달성하다

달성군은 2022년 12월 대구시 최초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의 활약

지난해 총 4709명의 시민이 문화활동에 참여해 911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화원우체국이'문화우체국'으로 거듭났고, 옛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은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2023 도시문화캠프'가 열렸다.

이 사업은 국비 포함 최대 200억의 예산을 활용해 2027년까지 이어진다.

하반기에도 멋진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야외오페라 '사문진-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출연자의 대부분은 달성군민을 포함한 대구 시민이다.

△달성군 풍경의 변화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뮤지컬콤플렉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교도소가 옮겨간 하빈면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이 들어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변화

상반기에는 도동서원 등 관광지에서 역사를 배우고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의 맛집을 방문하는 '달성 인문학 투어(현풍권역)' 사업이다. 대중교통만으로 일부 관광지에 접근하기 어렵다운 단점을 보완했다. 하반기에는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한 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화원 가족테마파크 조성, 세천 금호강변 가족캠핑장 조성,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사업 역시 한창이다.

최근 테크노스포츠센터 인근 생활체육광장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체육사업 성과

파크골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달성군은 총 8개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 중이며, 연간 이용인원은 46만 명이 넘는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과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옥포읍 반송리~옥연지 송해공원~간경리의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등이 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 지역인 차천사거리 일원을 국비 451억 원을 투입해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진출입 대형차량의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는 현재 달성군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음을 군민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라며 "달성군의 가장 좋은 나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도 힘찬 전진을 이어가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숨가쁘게 달려온 '주낙영 號' 최대 성공작 APEC 유치

〈호〉

본격적인 '예산' 2조원 시대 열고
2년간 공모사업 총86건 선정쾌거
국비 6919억 원 확보 최대 겹경사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관광객 5천만 시대 연다 호언장담
미래 원전 중심도시 힘찬 '발돋움'

주낙영 경주시장의 정치 최대 성공작은 누가뭐라해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다. 지금 경주는 무척 바쁘다.

2025년 11월 경주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귀빈객 맞이 준비로 너무나 분주하다.

신라천년 경주가 다시한번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간다.

숨가쁘게 내달려온 '주낙영 호(號)'의 말발굽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다.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말 그대로 '허위단심'으로 달려온 7년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된 것은 우리지역 역사의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중수로 해체기술원 착공, 국내 최초 에어돔 축구훈련장 개장 등 지방 소도시를 명품 도시로 성장시켰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는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가 문을 열어 급변하는 산업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R&D 거점 센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살림살이 2조원 시대

민선8기를 시작으로 2022년 2조 1000억원, 지난해 2조 220억원, 올 1회 추경예산으로 2조 680억원을 확정 지으면서 경주시가 본격적인 예산 2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 동안 공모사업에 총 86건이 선정되면서 국비 6919억 원을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 분야별 2년간 평가에서는 134건의 기관표창을 받는 등 역대 최다 수상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 달성이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경주시를 포함해 단 6곳뿐이다.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다. 행안부 주관 다산목민대상 수상, 4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한국관광의 별'에 대릉원 및 동궁과 월지가 선정돼 대외적으로 경주의 위상을 드높였다.

▣관광객 5000만 시대 '포문'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4768만 명이 경주를 다녀가 경주는 곧 관광객 5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먼저 14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함께 디지털 복원,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찬란했던 신라의 옛 모습을 구현하는데 집중한다. 숙박, 교통, 맛집의 예약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경주로 ON' 앱 통합관광 플랫폼을 지난해 출시했다.

지난해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야간에 관광객들을 머무르게 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떠올랐다.

사계절 전천후 축구 훈련장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은 지난해 2월 개장 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현재(6월20일 기준)까지 총 1240팀, 2만9260명이 다녀갔다.

▣첨단 과학·산업도시 '탈바꿈'

전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SMR 국가산단이 2030년까지 문무대왕면 동경주나들목 부근 일대에 들어선다. SMR 국가산단이 관련 기업 집적·지원이 중심이라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 혁신기술 연구개발의 요람이다.

지난해 12월 착공된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완공되면 원전 해체 개발기술 검증 시설·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전문 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가 문을 열었다.

올 연말에는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가 완공된다.

▣서민생활 안정 '올인'

경주시가 202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한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가장 많은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빛광장·빛거리 조성은 물론 창업점포 12곳과 스타점포 10곳에 대해 골목길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한다.

불금예찬 야시장, 거리예술위크부터 아트페스타까지 다양한 계절별 문화행사를 펼치며 황리단길, 대릉원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유인한다.

최근 도심 빈집이 마을호텔로 변신해 지역 상권 회복과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3월 현판식 당일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 현판을 받은 마을호텔 4곳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마을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재생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자 농어촌 건설에 '매진'

경주시가 2028년까지 5년간 총 604억원을 투입한다.

건천·현곡·서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조성,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마련한다.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탈률 0%)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5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3개항이 선정됐다. 방파제 정비, 다목적광장 및 활력센터 조성 등으로 어항·어촌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감포 나정 고운모래해변 일원이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해양레저 지원센터, 용오름길, 해양조각 공원 등을 조성한다.

환동해 오션플라자(엑스포 공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양남),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감포),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경주가 내륙 관광을 넘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저출생… 63개 사업 791억 투자

경주시가 지난 4월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에 791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예정인 '청년 임대주택' 정책이 눈에 띈다.

입주자들은 월 5만원(1인당)의 사용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2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시민들의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4개 반 30개 단체로 구성된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주낙영 시장은 "민선 7기에 이어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비롯해 SMR 국가산단 유치,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건립 등의 굵직한 역점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역량을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한국적인 정체성의 뿌리와 대한민국 경제 기적 DNA의 근원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 명성 알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를 다시 세계에 알릴 기회로 만들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만에 다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외교 행사다.

2025년 제32차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정체성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돼 온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혁신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 80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효과 등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방시대를 앞당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7월부터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섰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태평양 연안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 전 세계 국내 총 생산(GDP)의 약 62.2% 교역량의 50.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APEC 창업을 주도했다.

▣세계는 경주로 통한다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지난 4일 "지난 6년 재임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APEC 정상회의 유치"라며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3년을 맞아 언론 간담회를 열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까지 소회와 기본 로드맵을 밝혔다.

시는 전날 경북도와 함께 APEC 준비지원단 10명을 각각 배치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회의장과 숙박시설, 미디어 등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항부터 시작되는 의전과 수송, 의료 등 운영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한다.

50년 된 대한민국 1호 보문관광단지의 낡은 시설물과 경관을 정비하고 보문호수에 음악 분수대 설치, 시가지 간판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민 서비스교육과 대학생 중심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가는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기념공원과 기념행사 등 포스트 APEC에 적극 대비한다.

주 시장은 16개월 남짓 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각 국소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중점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등을 주문했다.

주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으로 유치한 국가 메가 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행사로 보답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조만간 준비지원단 구성이 완료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참여 등 시 각 부서가 주인이 돼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추진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PEC 추진체계 조기 완료를 위해 예산지원·편성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APEC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범시민 추진위 확대,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단 등으로 민간자문위원 구성 등 법적제도와 인력풀 조기 완비도 특별히 주문했다.

가로환경 개선, 월정교 일원 대단위 꽃단지 조성, 골든시티 경주 분위기 연출, 폐철도 터 단절구간 연결 및 레일 미철거 지역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도 주문했다.

문광부의 세계유산 축전·대릉원 미디어 파사드 2년 연속 유치와 APEC 유치 과정 대시민 보고, 유공자 표창, 손님맞이 시민 선진의식 전개 협조 등 APEC 유치 성공 축하 이벤트 실시도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APEC 개최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형 SOC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 조기 투입으로 기한 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방도 904호선(포항-강동-천북-보문) 확장 및 국지도 승격, 보문단지 주변·황남동 대형 환승 주차장 조성, 폐 철도부지 철거, 팔우정 로터리-분황사 입구간 도로 확장, 구 경마장 터 APEC 기념공원 조성 등 총 36건 3924억 계획 예산 조기 확보를 특별히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반환점 맞은 김진열 군위군수, 전반기 성과와 비전 제시

127년 만에 관할구역 변경한 군위군, 대구시로 첫돌 맞아 군위군, 변화·혁신·소통으로 대구 굴기의 선봉장 될 것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군이 급변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개발 청사진과 대구시 편입 1주년을 맞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군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지난 1일 민선8기 군수 취임 2주년 및 대구 편입 1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 열정과 집념으로군위의 아름다운 변화와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낸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민선8기 전반기에는 군위의 대구 편입은 군위의 번영과 굴기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아 한층 높아진 도심생활권의 향유와 대한민국 신(新)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성장기회를 얻게 됐다.

또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위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군위의 산과 강에 가치를 더해줘 청정 군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 외에도관행에 대한 타파와 혁신적인 도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가 전년대비 2단계 큰 폭의 상승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건전성 및 효율성분야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군수는 다가올 시간은 "지금 군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다. 그리고 대구 편입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수 있도록 해주신 군민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중심지로서 대구·경북의 번영과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군위군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전략적 공간개발 구상으로 공항도시 조성

군위는 대구공항 이전으로 개발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군위군은 대구시와 함께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76만평(25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와 첨단산업단지 1단계 사업으로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191만평(630만㎡) 규모의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를 개발한다.

2단계 사업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 및 미래신산업에 기반한 제2·3 첨단산단을 추가 조성해 최대 930만평(3070만㎡)의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중남부 신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이러한 거대 담론안에 군민의 목소리를 녹여내어 구체화하고,

특히, 민군상생타운을 통한 젊은 세대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대구도심 군부대 이전에도 전 군민과 함께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붓는다.

이러한 전략적 공간개발로 군위 중심의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25만명 규모의 에어시티를 만들어 간다.

또한 신도시 발전에 기반이 되는 신공항 광역철도,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신공항 연계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국도 28호선 4차로 확장, 동군위 IC에서 국도 28호선을 잇는 연결도로 등간선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수단 연계 방안도하나하나 챙겨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 간다.

▣활력도시 건설

주민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채워가는군위형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생활공감형 SOC를 확충하고 군위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등으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마을기반을 다진다.

또 농어민 수당의 지속적인 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 분소의 운영으로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원하고 스마트 IT 기술에 기반한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사업을 구체화해 군위의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푸드플랜 유통 거점을 마련하여 K-농업을 선도해 활력이넘치는 생기있는 군위를 건설한다.

▣매력있는 문화 관광 도시 건설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다.

유용미생물과 스마트 악취저감 시스템을 활용해 냄새걱정 없는 깨끗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대구의 중심산이 된 팔공산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수려한 자연의 가치를 더욱 높혀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인 삼국유사의 세계화와 군위만의 특색있는 대표축제 개발을 더해 대구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한다.

또한 편리한 교통과 대도시 접근성을 기반으로 각종 생활스포츠대회 유치하고180홀 규모 전국 최대 산지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한 여가뿐만 아니라생활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레저공간을 만든다.

▣교육과 복지가 든든한 행복도시

교육은 도시의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아이조아센터 운영으로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돌봄과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세대희망 허브센터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간을 마련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이 군위안에서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최적의 올라운드 보육시스템을 갖춰 살고싶은 군위를 건설한다.

여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교육발전특구 시범 추진, 특수목적고 설립, 몰입영어교실 등과 같은 군위만의 특화된 교육지원을 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24시간 당직진료실 운영,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고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누리는 문화콘텐츠의 활성화와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및 어르신 돌봄체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구현한다.

▣ 열린행정, 공감행정 구현

대구의 프리미엄 생활권에청렴에 기반한 끊임없는 내부혁신과 친절을 바탕으로 군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청렴군민 감사관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고행정의 문턱을 낮춰 군민곁에 더 가까이서 봉사한다.

또 행정칸막이 해소와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사업 TF팀과 같은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행정경쟁력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간다.

군정 최고 가치를 군민에게 두는 열린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라며 "대구 편입으로 시작된 군위의 무한한 성장 기회인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건설로 이뤄 대구 미래 100년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대구.경북의 협치와 상생의 가치를 오롯이 이어나간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출범 지난 2년간 늘 군민 여러분과 소통해 다양한 성과와 군위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도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군위군을 대구 굴기의 선봉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김광열, '웰니스 중심도시' 선포…관광 성공신화 만든다

최대의 '아킬레스건' 공직선거법위반 해방 이제 신발끈 조여매고 '새 영덕' 건설 총매진

김광열 영덕군수의 꿈은 다함께 잘사는 고을 만들기다.
영덕은 사계절 관광지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온 천지에 널려있는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영덕 인구는 3만3518명(남 1만6011, 여 1만7507명)이다

민선8기 영덕 사령탑에 오른 김광열 영덕군수.

취임 1년 74.7%의 군민이 긍정 평가, 84% 군민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행정수요 조사 결과를 얻었다.

초선으로 지휘봉을 잡은지도 2년 세월이 훌쩍 지났다.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임기내내 발목을 잡은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상 2년 내내 재판에만 몰두했다.

김 군수의 선거법위반을 놓고 군수직 상실 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은 보궐선거 한다고 떠들어댔다.

선거준비단도 꾸렸다.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김 군수를 조여왔다.

그런 그가 회생했다.

지난 2월1일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사회생한 셈이다.

그가 화려하게 부활 영더구 사령관으로 면모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김 군수에게 거는 기대는 가 너무 크다.

잃어버린 시간을 군민에게 되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매력적인 투자 환경조성 △웃음꽃 피는 농산어촌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광 △같이하면 행복한 복지 △마음나누는 소통행정이라는 군정 5대 비전을 실천하려 한다.

김 군수는 군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행정역량을 집중해 미래 영덕으로 나간다고 다짐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이다.

김 군수는 관광산업에 행정력을 모은다.

영덕은 관광산업이 전체 산업의 64%다.

관광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1·2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김 군수는 "지금 영덕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과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비 832억 원을 확보했다.

연계사업까지 더한다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강구항과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집중 투자된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은 전국 최대의 수산식품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자원을 가공하는 생산설비, 비즈니스 지원센터, 물류센터, 연구센터 등이 들어선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수산업과 관광업이 융합된 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입주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두 사업은 1차 농·수산업, 2차 가공업, 3차 서비스업에 이르는 복합경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때문에 김 군수는 정주 인구를 위한 인프라와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관광 선진화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의 발전 모델로, 지금껏 맞이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있다.

그래서 인지 김 군수는 지금 신발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매고 동부서주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비확보다.

그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

정부부처 방문에는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김 군수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강구(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비 증액 등이다.

이 뿐 아니다.

영덕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평가에도 총매진 하고있다.

군은 12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에 따는 현장평가자들을 김광열 영덕군수가 직접 환대하고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유네스코의 현장평가는 2022년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4개 시군이 보유한 국가지질공원 2693.69㎢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11~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영덕군의 현장평가는 12일 이뤄졌다.

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필수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영덕군 해맞이공원 약속바위 일대를 현장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의 상호 협력적인 다양한 활동을 직접 확인했다.

군은 △해맞이공원 △경정리 퇴적암 △죽도산 △영덕대부정합 △대진리 편마암 △고래불해안 △철암산 화석산지 등 7곳이 2017년 국가지질공원 지질 명소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원척리 화강암 △용덕리 혼성암 △용추폭포 △도계리 아다카이트 등 4곳을 추가로 인정받고 국가지질공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김 군수는 경북동해안지질공원 사무국과의 양해각서로 해맞이공원 약속바위 일대에 화강섬록암을 조망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설치한다.

더욱 편리하게 지질 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지질 공원 해설사가 상주, 지질 공원 안내센터를 설치한다.

정기적인 안내판 정비와 지질 대장정, 지오트레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질 생태 탐방과 체험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장평가와 최종 심사결과는 올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아시아·태평양 총회(베트남 까오방)에서 예비 결과가 결정된다.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동해안 최고의 트레킹코스인 불루로드와 더불어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관광산업에 총매진한다.

1000만 관광객의 전국적인 명성에 걸맞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체류형 관광을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 인구도 유입하게다는 방안이다.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 관어대 웰니스 관광지 조성, 문산호 리뉴얼 사업, 축구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 등을 추진해 지역의 청정자연과 문화 자원을 관광 명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반환점을 돈 그에게 있어 영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풀어야 할 숙제 산재해 있다.

김 군수가 후반기 내홍은 영덕발전 청사진은 바로 '웰니스 중심도시' 비전 선포다.

4대 혁신과 12대 전략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정례조회와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후반기 군정 비전으로 '대한민국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을 신조로 상반기 성과와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군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 지역, 행정의 4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12대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 특화 관광과 신산업을 육성,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웰니스 도시로 도약한다.

김 군수는 "지난 2년간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온 600여 공직자들의 힘으로 상반기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산업과 새로운 성장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 작금의 경기침체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취임 당시 다소 추상적이었던 공약과 비전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들로 드러나고 있어 희망과 도전의 마음가짐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지난 2년간 4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전 대비 평균 12.1% 높은 국·도비 2600여억 원을 확보, 본예산이 19.7% 향상됐다.

최초로 6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둬 안정된 재정 속에 영덕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조여은 기자

창간 28주년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일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 용 일

가수 우순실

가수 백 봉 기

가수 양 혜 승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리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

대구광역일보 창간 28주년 기획섹션 민선 8기 후반기 남은과제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4391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27~23℃ 경북 22~28℃ 단기 4352년(음력 7월 14일)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남한권, 주민안전의료·복지실현 넘어 일등 울릉 건설

민선8기 후반 출발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낭보 들려 에메랄드 3대 프로젝트 실현

남한권 울릉號 민선 8기 후반기가 도도하게 돛 올렸다.

남 군수는 울릉 대전환 반환점을 돌아 더밝은 미래를 향해 나간다.

남 군수가 내건 군정목표는 △군민이 주인인 열린군정 △다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웃음꽃 피우는 지역경제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이다.

▣에메랄드 3대 프로젝트 실현

그는 7개분야 71개 실천과제를 실천한다.

민선8기 공약사항을 보면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교육기반시설 유치·확충(국제학교, 영어마을, 대학분교 유치 등) △울릉고 명문만들기 지원 △학생 입학준비금 인상 △전입세대 지원금 인상 △결혼장려금 인상 △투자유치 활성화(기업투자, 연구소 유치 등) △청정 물·공기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실현이다.

관광과 경제성장 기반구축에도 총매진한다.

주민안전의료·복지실현을 넘어 잘사는 일등 울릉을 건설한다.

문화가 있는 친환경 섬을 만든다.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에 행정력을 모은다.

에메랄드 울릉 계몽운동 3대 프로젝트도 실현한다.

'에메랄드 빛 함께 지켜요. 에메랄드 열린 마음으로 웃어요' . '에메랄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출발하는 울릉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이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 낭보

남한권 울릉군수에게 있어 최대 현안사업은 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제정은 울릉군에 있어 너무나 절실하다.

민선8기 후반 출발과 함께 남한권 울릉군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다.

국가 최외곽에 자리 잡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11일,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상휘 국회의원이 울릉도와 흑산도 등을 포함한 국토외곽 먼섬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특별법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국경수비대 역할을 수행하며 고립된 위치에 처해 있는 먼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서해5도 특별법에 비하여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지원, 대학입학 특례제도 등 다수 혜택이 배제돼 상대적으로 차별 문제가 도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해5도 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 부여 및 관련 혜택 포함을 목적으로 하여 준비됐다.

이상휘 의원은 "개정안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함께 울릉도 등 먼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했다.

남 군수는 "이상휘 의원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울릉브랜드 세계화 실현

울릉군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차원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각종 사업 건의 및 계획 수립 작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 절차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남 군수는 울릉브랜드 세계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울릉도의 자원별 유형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상징·심미성을 겸비한 상징물 개발을 통해 군의 인지도를 높인다.

궁극적으로 울릉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다.

남 군수는 오는 2026까지 울릉군 일대에 이 사업을 한다.

울릉 브랜드 세계화 실현 및 구체화를 위한 유형별 실태 분석, 대표경관자원 유형, 지역 특산품, 먹거리를 만든다.

정립된 사업유형별 특화 방안 모색 및 실현가능성 검토에 따른 세부 실행도 마련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 힘찬 출발

남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2주년의 서막을 알리는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1일 군민회관에서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반기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알찬 후반기 2년을 다짐하는 정례조회를 가졌다.

정례조회는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영상 상영에 이어 꽃다발 증정, 군수 표창에 이어 에메랄드 울릉도 계몽운동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에메랄드 울릉도 계몽운동은 군이 지난해 선포한 도시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정·청렴·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민 행동 실천 문화 운동으로 민선 8기 후반기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간다.

남 군수는 정례 조회에서 훈시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에 매진해온 공무원과 공무직들을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군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매진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온 지난 2년이 마치 이틀과도 같이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회고했다.

그는 "지난 전반기 동안의 수많은 사업과 실적들은 앞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군정의 밑거름이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다. 이제 다가올 후반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저와 혼연일체가 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행정기구 개편 단행

남 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도 단행했다.

민선 8기 들어 조직개편이 2번째다.

미래비전과 정책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27일 제2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건이 의결됐다.

군의 조직은 기존 3실 1단 8과(47팀 196명)에서 2실 1단 9과(48팀 206명) 체제로 전환된다.

경제투자유치실은 경제교통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항공시대를 대비한 경제·투자·교통·에너지 등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총괄 진행한다.

건설과는 안전관리 기능을 흡수해 안전건설단으로 명칭 변경 및 직급이 상향되며, 문화관광체육실은 관광과 문화·체육으로 업무를 나눴다.

관광 분야에 산림업무를 흡수한 관광산림과를 신설해 친환경 산림생태 관광섬을 조성하게 된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 분야에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통합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비롯한 군민의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인문교양) 장려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

대단위 공공건축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 배가를 위해 도시건축과를 신설한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군의 정책사업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저출산 대응에도 힘을 쏟는다.

본청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인력은 외청의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조정했다.

조직개편은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계획으로, 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준비 중이다.

남 군수는 "후반기 핵심사업의 완성을 위해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새울릉 실현을 위한 역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울릉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 한국의 빛낸 사회발전 대상'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먼 섬(육지에서 50km)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24 한국의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받았다.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확고한 국가경제에 묵묵히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됐다.

남 군수는 울릉군민을 위해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됐다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남 군수는 2022년 민선 8기 울릉군수 취임 후 울릉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남 군수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섬에 거주하는 국민은 육지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의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울릉군수 후보 시절부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과거에도 수차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해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정이 불발됐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끝에 임기 1년이 지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은 섬 지역주민들에게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

군은 대한민국에서도 작은 자치단체로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출산지원금, 보육정책 등 출산장려 정책 개발에도 노력했다.

다이음터 조성 등과 같은 도서관, 평생교육원 건립 등을 위한 국비확보를 통해 학생, 주민교육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K-관광섬 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를 확보해 작은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울릉 삶의 질 지수 최고

울릉군이 농어촌 자치단체 가운데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높다.

이 사실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전국 농어촌 시·군 129개를 대상으로 경제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5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다.

군 단위에서 울릉이 54.73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역 내 고용률이 83.05%로 전국 최고다.

기대수명과 인구 증감률도 높아 경제와 보건·복지, 지역 활력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과 20개 지표로 구성,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이뤄진 '농어촌 삶의 질 지수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울릉군은 전 영역이 우수했다.

지역 내 고용률이 83.05%로 가장 높아 경제영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기대수명과 인구증감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복지 영역과 지역활력 영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업위는 앞으로 농어촌 상황에 맞는 지수의 고도화, 정책 확산, 법적 기반 마련 추진 등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정윤환 기자

김주수, 행복 안전한 살기좋은 '의성 건설' 박차

전반기 민선 8기로 경쟁력 강화
후반기 성장동력 확실히 챙겨

김주수 의성 군수는 지난 10년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난 2년 동안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사업, 세포배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위해 동분서주 열정적으로 뛰었다.

민선8기 전반기에는 미래성장동력 조성과 재난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거점도시의 생활인프라 고급화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으며, 청년센터 운영,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국가지질공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남은 민선8기 후반기는미래 의성군의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일상에서 직접적인 변화를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에 주력하고, 의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만들어 간다.

▣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대구·경북의 최대 프로젝트인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이 목표다.

항공물류를 비롯한신공항 배후지역 발전계획과 공항신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푸드밸리, 관광문화단지, 광역 교통망 확충 등항공특화 산업의 기반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중인 세포배양산업은최근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세포배양 소재 생산과 상용화를 위한세포배양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연계산업으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제2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3월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가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돼 국내 대테러 드론 대응 훈련과민간 안티드론 장비기술 시험을 위한 최적지로 거듭났다.

올해 2월에는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있다.

▣행복한 의성

의성형 보건복지 정책을 더욱 확장해 행복한 의성을 만든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는올해로 4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6년 정부의 전국 확산 방향에 맞춰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내실있게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민-민 상시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일상 속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주민 주도형 돌봄공동체도 함께 만들어 간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3대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외래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하고, 2025년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목표로임신부터 출산까지 보건·의료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보육 인프라를 개선해,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

아울러,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공공임대주택도 조성해 가고 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성

군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후 위기에 대비한재난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과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차례로 선정돼 안전관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스마트 재난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봉양온누리터를 시작으로 의성읍 온누리터가 작년 연말 준공하면서, 행정·복지·문화·교육의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있다.

군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안계행복플랫폼과 금성, 다인온누리터 의운영을 활성화하고, 366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으로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에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대천물놀이장 조성, 서의성목욕탕 건립 등의성, 봉양, 안계를 중심으로 한거점 도시의 생활인프라를 고급화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의성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 고도화

2019년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과 함께 시작한우리군의 청년정책은 실효를 거둔 사례로전국적으로도 우수성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취업, 정착, 성장까지 통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40억원의 청년발전기금으로미래성장 가능한 청년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청년들의 정착과 소통에 필요한주거공간과 권역별 복합문화센터 등12개의 청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봉양농공단지 패키지 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위한기반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서 창농까지 청년농업인을 위한종합적인 정책을 지원하여,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젊은 농촌을 만들어간다.

▣농업 디지털 혁신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은 우리 지역의 밑바탕이자 원동력이다.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스마트 농업 확산 체계 구축, 산지 유통체계 개선, 안정적 노동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존의 농업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농업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법 육성과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경축 순환농업을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복합가공센터를 조성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6차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 중심의생산유통 통합마케팅 조직도 활성화 한다.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의성만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가지질공원 12개 명소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의성만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성종합체육관을 계획대로 준공해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컬링과 씨름, 드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저변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민주도의 축제 개최와 일상 속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문화예술,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간다.

지역에서 스스로 행복한 주민 중심의 군정을 운영한다.

▣교육환경의 획기적 변화

청소년들은 의성의 확실한 미래 자산이다.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교육지구와 작은학교 살리기 등으로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와 인구감소, 이상기후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재성 기자

윤경희, 민선8기 공약 57% 달하는 높은 공약 이행

윤 군수가 바라는 청송은
군민이 주인인 청송 건설
소외계층 無 모두 공정한
행복을 누리는 청송 사회

윤경희 청송군의 청송 사랑은 남 다르다.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다진다.

윤 군수가 바라는 청송은 "군민이 주인인 청송 건설"이다. 그는 지금 청송군, 청송人 생애기록 이색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매년 1개 마을을 선정,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생애와 마을 이야기, 청송의 변천 과정 등을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파천면 신기리 새터마을, 2023년 주왕산면 주산지리 이전마을, 그리고 올해는 진보면 광덕리 교동마을을 만난다.

개인의 삶은 사회 공동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사회를 이루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

청송군 근현대 구술기록 수집 사업에는 어르신들 본인의 생애사와 함께 사회적 경험도 함께 담겨 있다. 이것이 잊혀져가는 청송만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기억을 통해 기록해야 하는 이유이다.

윤 군수는 "어르신들의 주름에 깃든 삶의 풍경에는 그들의 삶을 걸어온 기나긴 여정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윤 군수는 청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대는 청송人의 구술기록 수집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하나되는 청송 건설

윤경희 청송군수가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2022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지난 2년을 군민과 함께 달려왔다.

군민에게 약속한 민선8기 73개 공약사업은 2024년 1분기 기준 57%에 달하는 높은 공약 이행률로 순항중이다.

경북(34.8%)평균치 보다 월등히 높다.

주요 완료 공약으로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확대 △청송버스 무료승차 지원(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진보 지역아동센터 확충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사업 △행정혁신 프로그램 '청송어람'이다.

주요사업을 포함한 총 23개의 공약 사업이 완료됐다. 이 결과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S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는 '소외계층 없는 모두가 공정한 행복을 누리는 청송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민선8기 2주년 분야별 주요 성과에 따른 농업분야는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지원했고, 복지 분야의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8282 민원처리반 운영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관광·경제 분야의 지역활기소생 도모 △파천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 △제17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제1회 청송백자축제 개최 △청송사랑화폐 700억 확대 유통이다.

지역 이미지 향상 분야는 △청송읍 중앙로·금월로 전선지중화 사업 △청송읍 야간경관 조명 조성 △청송읍 회전교차로를 설치 시행으로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견고히 다졌다.

윤 군수는 민선8기 3년차에 진입하면서 주요 군정성과를 토대로 군민과 관광객의 웃음소리 넘치는 활력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한다.

▣청송군 농산물 경쟁력 향상

군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일손 절감으로 사과 생산력을 늘리는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청송사과 생산량이 타지역 사과보다 생산량이 많아야 시장에서 입지가 견고해지고 사과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다.

군민소득을 높이는 청송사과 생산량 증대 방안 연구를 위해 현동면 거성리에 '새소득 시범사업(사과 시설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새소득 시범사업은 조·중생종 사과 조기생산, 다수확 사과 재배 기술개발, 스마트팜 기술연구, 청송사과 품질향상 요인 등을 발굴한다.

올해 준공을 앞둔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병충해에 강한 대목 육성, 재해예방기술을 보급으로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한 품질의 청송사과 생산을 유지하고, 영농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영농 일자리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차별 없이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육아 부담이 큰 젊은 부부들에게 '유모차와 출산축하 박스'를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

'진보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청송형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진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을 활성화한다.

현서~진보 단일노선을 신설하고 승강장 추가 설치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군민들 교통 편의를 향상한다.

'8282 민원처리반', '건강마을 조성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청송군민의 삶을 보장한다.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힘을 합쳐 '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청년창업을 돕는 항노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상품화, 지역학생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송읍 월막리 옛 군수 관사 터에 조성하는 '청송공공주택 청년 빌리지 '와 진보면 일대에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는 청년들의 지역 청착을 도와 청송군에 청년들의 활기를 돌게 만들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왕산 사계절을 맛보다!', '주왕산 산소맛길 조성사업', '달빛이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사업으로 청송군 대표 음식을 추가 개발·홍보 및 거리개선을 시행한다.

▣문화·체육체험 기회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다양화를 위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을 추진한다. 호텔의 편리함과 캠핑의 즐거움이 결합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은 옛 주왕산 초등학교 터에 조성된다.

주왕산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결합,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과 관광소득 향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난.

파천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1,2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청송군의 이미지 변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살고 싶은 청송 건설

행복한 청송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청송군 농촌협약 346억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 △청송읍 거대리·주왕산면 신점1리·부남면 하속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0억 △진보면 각산리 외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 20억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80억'의 총 사업비 786억원의 농촌생활 공간개선 사업을 한다.

정주인구를 늘리고 청송의 가치를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진보면 및 산남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과 거리개선으로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진보면 파크골프장, 산남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 군민의 체육활동까지 살뜰히 살핀다.

윤병문 기자

오도창 영양군수 군민과 약속 지킨 公務 군수

지방소멸위기 극복 공모사업 후반기 영양군민 더 멀리 희망 향해 돛 올리고 힘찬 출항…

두메산골 오도창 영양군수가 힘차게 전진한다.

그는 민선8기 후반기 영양군민과 함께 더 멀리, 희망을 향해 손잡고 거센 파고를 넘는다.

도도하게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항했다.

그는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2년은 '행복한 변화'의 씨앗을 심은 시기라면, 남은 2년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희망의 꽃'을 피울 차례라고 생각한다. 그 결실을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2년째인 지난해에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2조 1000억 원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자부했다.

오 군수는 "공모실적 1등 공신은'행복한 변화로 희망찬 영양'을 꿈꾸는 군민들의 염원과 믿음"이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밤낮을 이어가며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공모사업에 힘썼던 것처럼 선정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전력질주

오 군수는 임기 전반기를 보내며 군민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었다.

민선 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행정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오 군수에 있어 민선 8기 2차 년도의 가장 큰 성과는 양수발전소 유치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영양은 축제의 도가니였다.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들어설 국내 최대(1GW) 규모의 양수 발전소는 총사업비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 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 관광수입 증대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1회) 240억 원 외에도 건설 8년·운영 50년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401억 원과 사업자 지원금 295억 원을 관광, 체육, 복지 분야에 쏟아 붓는다.

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확보액 122억 원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확보액 120억 원 △2025년 농촌협약 공모 확보액 366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 확보액 157억 원 △동부리 농촌공간정비 3차 공모 확보액 181억 원 △화매지구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비 146억 원 등 천억 원을 확보했다.

▣장밋빛 청사진

이 뿐아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3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고등급(가) 달성 △영양군↔SK텔레콤 천체관측소 건립 협력사업 △영양만의 특화된 능이 및 꽁꽁 축제 개발 등을 민선 8기 2차 년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오 군수는 임기 후반기 군정 운영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역점사업 밑그림은 △노지 고추 스마트 영농기반 구축 △엽채류 특구 조성 △자작누리 치유의 숲 유치 △숨 쉬는 힐링스파 조성 △선바위관광지 휴·미·락 정원조성 △체류형 전원마을 조성 △종목별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역 내 특성화고 설치 △미국 어학연수 2배 확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영양군 단선철도 구축 등이다.

영양터미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영양읍 시장통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수중재활선터 건립 △50세 이상 군민건강검진 완료 △영양 군립 공원묘원 조성 등 영양군의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재편,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과 건강복지 증진에 행정력을 모은다.

영양군 지방소멸 대응 노력도 빛났다.

오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축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으로 가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모사업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오도창 공약 지켰다

오 군수는 민선 8기 취임사에서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예산 5000억 달성, 고추생산 1위, 농가소득 6천만 원 달성이라는'5·1·6 프로젝트' 를 실현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영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의지가 공약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영양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보고서 역량강화교육, 직원 선진지 견학, 6급 팀장급에 이어 7·8급 군정시책보고서 평가 실시로 공모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는 물론이고 직원조회 및 간부회의 시 수시로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군수 본인도 '공모 군수'를 자처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공모 공세를 펼쳤다.

민선 8기 영양군은 농업, 생태관광, 사통팔달 교통 여건 개선에 주력해 왔다.

총 38건 1,57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

영양군 한 해 예산(4천억 원)의 38%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이다.

공모실적은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이다.

2024년 상반기에만 5건에 97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농업분야 9건 289억 원

영양군은 군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소득작물 및 기후 및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화매지구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46억 원은 기존 논 위주 급수방식의 불안정한 용수공급체계 개선과 쌀보다 소득이 높은 상추 등 엽채류 재배 확대에 활용된다.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으로 확보한 50억원은 안정적 농작업 인력수급으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유치한'외국인계절 근로자' 등의 숙소 건립에 쓰인이다.

▣지역개발분야 9건 989억 원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확보한 112억 원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민간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액 157억원은 ㈜발효공방1991(대표 이동훈)과 2024년부터 3년간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조· 체험·휴식 시설인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숲, 지훈예술제 등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촌협약' 으로 확보한 366억 원 중 160억 원은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한다.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거점시설 건립(각 40억원)과 청기면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나선 권윤동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민선 8기 후반기 水魔와 시작

피해 우려 지역 재난 취약 지구점검
피해최소화 행정력집중…복구구슬땀
후반기, 교육명품 도시, 스포츠 · 문화
관광도시 거듭 태어난다… 주민 약속
김학동 한국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전쟁터다.
삶이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민들은 망연자실이다.
넋을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국 농작물 3128만평 침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ha가 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128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의 36배에 달한다. 가축도 76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농작물 1만756ha(약 3253만 6900평)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139.8ha(42만2895평)다.

침수 규모가 하루 만에 413.4ha 늘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7543.6ha(2281만 9390평)가 침수됐다. 전체 침수 면적의 70.13%다. 그 뒤로는 경북(1759.4ha), 전북(1191.7ha), 대구(99.0ha), 충북(91.1ha), 대전(67.2ha), 경남(3.4ha)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품목 중에서는 침수 피해의 71.8%가 벼에 집중됐다. 벼는 7729.8ha(2338만2645평)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가장 컸고, 콩은 697.7ha, 고추는 376.7ha가 침수됐다.

과일과 채소류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수박(185.5ha), 포도(171.5ha), 참외(258.4ha), 복숭아(134.9ha) ,상추(132.1ha), 토마토(10.3ha) 등이 물에 잠겼다. 인삼(108.4ha)과 깻잎(100.1ha), 멜론(91.3ha), 블루베리(74.4ha), 딸기(69.2ha), 사과(55.5ha) 등도 피해를 입었다. 축사 12.6ha도 침수와 파손을 겪었다. 가축은 76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소 41두, 돼지 650두, 닭 76만4100마리, 오리 4만2100마리 등이다.

▣ 대구경북 수해민 망연자실

대구·경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호우피해로 출동한 건수는 총 131건이다.

세부 출동 현황은 인명구조 5건, 배수지원 34건, 안전조치 92건 등이다.

지난 9일 오후 10시18분께 달성군 가창면의 한 주택에 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호우특보 발효 현황에 따라 초기대응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등 변경하며 근무에 나서고 있다.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취약지역 227곳의 예찰·관리 중이며 율하, 가천, 이현 등 빗물펌프장 5개소도 가동 중이다.

하천변 산책로 12곳, 둔치주차장 5곳, 징검다리 38곳도 사전통제에 나섰다. 침수 우려로 인해 신천동로 전구간, 팔달교 하단 도로 등 지역 내 도로 12곳의 통행도 제한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호우 관련 소방 활동은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출동 현황은 주택 침수 등 139건, 토사 낙석 36건, 도로 장애 133건, 기타 119건 등이다. 동원 소방력은 438대, 1265명이다.

유실, 파손, 낙석 피해 등으로 도로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상하수도, 수리시설, 국가유산, 교육시설 등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천은 지금 수해와 전쟁

지난해 7월 15일 경북 지방에서 역대급 폭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예천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1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피해액만 983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경북 지역에서만 200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만 했다.

안동시에서도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홍역을 치른 예천군에 올해도 큰비가 내려 지자체가 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균 387.5㎜에 달하면서 전 직원이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호우피해 대비에 힘쓰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10일 오전 5시부터 예천읍 한천을 시작으로 용문면과 은풍면, 감천면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했다.

직원들 역시 담당 마을을 방문해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7월 1일과 4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렸다. 앞으로도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지보면으로 열흘간 422.5㎜를 기록했다.

지난 8일에는 하루 동안 172㎜가, 10일에는 60.5㎜가 쏟아졌다.

지난 7~10일까지 총 455세대 611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호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1, 2단계를 실시하고 피해 우려 지역과 재난 취약 지구를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우려가 크니 붕괴 위험지역이나 침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예천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3~16일 집중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도로(지방도 포함) 66곳, 하천(지방하천 포함) 83곳,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등) 34곳,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1108ha 등의 피해를 입었다.

예천군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한천 주변일대를 찾아 환경정비에 나섰다.

한천 둔치 주차장 주변이 폭우로 밀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토사로 엉망이 됨에 따라 군은 토사가 방치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 문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정비 활동에 나섰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건설장비와 직원들을 동원해 부피가 크고 시급한 각종 쓰레기와 토사물을 제거했다.

11일 오전에는 예천군 소속 직원 90여명과 제16전투비행단공군부대 장병 60여명 등 150여명이 담당구역을 나눠 한천 주차장 일대를 깨끗하게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각종 재해 발생 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복구에 적극적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후반기 폭우와 시작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8기 후분기가 출항했지만 수해현장을 누비고있다.

김 군수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교육명품 도시, 스포츠·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젊고 활기찬 도시 건설을 위해 미래형 농업정책 추진,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다.

김 군수는 출산단계부터 복지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교육과 일자리까지 연결해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학력신장 특화사업, 대입 맞춤형 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운영되는 국립경국대학교와 산학연계사업도 적극 실시한다.

스포츠 도시 예천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육상교육훈련센터 완공 및 양궁훈련센터 건립도 속도를 낸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회룡포, 삼강문화단지. 곤충생태원, 석송령, 예천박물관, 금당실 등 예천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결할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도 적극 전개한다.

활축제, 곤충축제, 회룡포 봄꽃축제, 삼강나루터 축제 등 예천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해 예천 방문 유동인구를 늘려간다.

디지털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미래형 농업정책도 추진한다.

신도시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젊은층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극대화 한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중심 정책을 적극 펼친다.

김 군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껏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동 예천군수가 '2024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됐다. 변화와 혁신, 도전의 가치로 예천을 성장시키고 있다.

김 군수는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 도전'의 가치 아래, '경북의 중심도시, 예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

취임 3년차를 맞은 권기창 안동시장의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각오는 남다르다.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취임사에서 밝힌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노력의 결과,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후반기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최고의 모델로 자리매김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뤘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로 조성 할 계획이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안동 물산업 발전 위한 동력 마련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다.

또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0년 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되며,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농 함께 잘사는 복합도시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 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됐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복합도시 실현이 다가오고있다.

▣1000만시대 문화관광 특구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든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간다. 이런 노력으로 권시장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조성한다.

▣ 시민을 위한 혁신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뤄 지방소멸 시대 극복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신뢰 구축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다.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품격있는 클린시티 안동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이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난다.

권시장은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3대 특구 선정,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댐을 활용한 물산업 전진기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안동시정은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할 것이다" 강조하고,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제시했다.

송명주 기자

칠곡군수 취임 3주년 "칠곡의 가치를 높여 나갈 것"

취임사 대신 프리젠테이션으로 곳간 채우고,경제 살리고,군민 늘리고

소통과 공감, 변화 혁신을 통해 칠곡군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출항한 칠곡호가 3주년을 맞이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취임사 대신 프리젠테이션으로 민선8기의 첫 시작을 알렸다.

김 군수는 군정 구호를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로 정하고 지난 2년간 5대 목표, 73개 공약을 중심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튼튼한 칠곡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칠곡의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칠곡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세일즈 행정을 펼쳐왔다.

그는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칠곡의 주춧돌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며 농업, 관광, 경제, 복지, 행정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또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호국에 머물러 있는 도시 이미지의 새로운 변화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eco칠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김 군수는 △소통과 공감 행정 △지역공모팀 신설 △칠곡우선운동 △교과중점학교 및 학군 통합 △법정문화도시 및 원도심 축제 △맞춤형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 왔다.

▣소통과 공감 행정

김 군수는 시간이 허락되면 관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사람 정(情)류장'을 통해 8개 읍면 주민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또 타운홀 미팅을 마련해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맞춤형 행정을 구현했다.

유연한 조직문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습적 업무와 의전을 줄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대비 2계단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역공모팀 신설

군정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는 공모사업에 있다는 판단 아래 지역활력과를 신설하고 경북도 유일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지역공모팀을 신설했다.

사업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었다.

또 투자유치과와 신산업정책 T/F를 신설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산업 유치에 나섰다.

특히'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8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90억 원의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문화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농기계실증랩토리 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50억 원과 2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칠곡우선운동

김 군수는 칠곡우선운동을 추진해 칠곡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농산물을 먼저 소비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외부 외출을 막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력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퍼뜩시장을 개최해 칠곡벌꿀참외 브랜드 가치 향상과 우수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와 신성장 유망산업 유치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과도한 규제 철폐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다.

지난해 3월에는 ㈜동일정공과 MOU를 체결해 왜관산단에 180억 원 투자와 8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 맞춤형 복지 정책

김 군수는 농촌의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할매래퍼, 할매글꼴 등을 내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역발상을 통해 다양한 실버 콘텐츠를 생산했다.

전국 최초로 할매들의 랩을 활용한 노인 치매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노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 있다.

또 관내 2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경북형 행복경로당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노후 생활을 돕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지난해보다 400여 명 증가시키고 2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과중점학교 및 학군 통합

김 군수는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탄탄한 교육 기반 조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칠곡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교육생태계 구축과 주민들과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도내 최초로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를 교과(영어, 수학, 정보) 중심 중점학교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유명 온라인 인터넷 강의 업체를 섭외해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구 북구와의 학군 통합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대도시 학생 유입에 나섰다. 이 밖에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교육생태계 구축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정문화도시 및 원도심 축제

지난해 35만여 명이 방문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2022년부터 왜관 시가지로 공간을 확장하여 왜관 1번 도로에서 205힐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등을 선보여 축제의 흥행은 물론 콘텐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를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여행, 인문축제, 문화거점 조성 등으로 칠곡만의 문화적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민선8기 후반기에도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지역인재 양성,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람이 몰리는 매력도시 칠곡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강영석 상주시장, "중흥하는 미래상주 기틀마련"

"다시 상주의 힘으로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길을 열어 가다"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민선 8기 강영석9대 상주시정이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상주시는 지방소멸 위험도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 브랜드 '상상주도'가 의미하는 창조적이고 주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아도 강한 상주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2년 전,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스스로 선발투수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말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2032년 준공 예정으로 순항, 기업투자 유치 1조 7000억원 달성, 상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실질적 분양 완료,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범적 운영, 5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 유지, 4년 연속 국도비 공모사업 1천억원 이상 확보 등으로 중흥하는 미래상주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민선 8기 남은 2년도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소멸에 응전은 시대적 과업

지방 소멸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갈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업이다.

상주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대적 위협에 대한 응전의 의지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가능한 미래상주 건설의 핵심과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응전의 핵심 과업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다.

지금까지 상주시민의 일자리가 농업과 낮은 단계의 2차, 3차산업이었다면, 앞으로 농업은 시대 상황에 맞는 미래형 농업으로, 2차산업의 확대를 통한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달성으로 일자리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시대상황에 맞는 미래형 농업의 변화에 투자하고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2차산업과 첨단산업의 확대를 통해 산업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를 달성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지난 4년간 1조7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청리일반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했으며, 상주일반산업단지 또한 준공과 투자유치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에는 청리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상주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의 도시로, 대기업의 본사가 여러 개 입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춰 상주 중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일자리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은 인구 이탈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상주일반산업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조기에 마쳤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청리일반산업단지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대기업 본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상주 중흥의 동력이 되도록 한다.

▣ 교육발전특구 선정

상주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전국 19개 선도지구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교육을 통해 출산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상주형 공교육 모델을 확립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대책을 추진한다.

상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인재가 상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여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재생사업의 고도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집적함으로써 난개발과 관리 비용을 절감하며, 남산 및 북천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발한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신청사 건립과 함께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청 일대에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 공간 혁신구역 사업 실시로 압축도시의 면모를 갖춰 상주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공간혁신구역 사업은 도심기능을 새롭게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춤형 돌봄, 적십자병원 신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정주 인구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상주의 미래를 위해 출향인과의 유대강화, 국민안전체험관, 지역활력타운, 청년임대주택건설 사업을 통한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확보하고, 만화특화 시립도서관, 세계모자축제 및 관련 사업 전개, 더본 코리아 상주지사 개설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순기능을 하게 될 중부내륙 고속화 철도사업과 대구 군부대 유치는 상주시의 대변신을 이끌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의 삶의 질 보장되는 도시

우리 시의 복지 철학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춤형 돌봄, 마을학교, 아동센터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미래교육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적십자병원 신축은 현재 신축부지 보상이 시작됐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현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원도심 기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존엄한 사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

▣ 생활 인구 확보는 중요한 과제

정주 인구와 함께 생활 인구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생활 인구의 핵심 자원은 출향인들이라 생각하며, 출향인과 고향 간의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출향인 모임인 각 지역 향우회 대표단과 교류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안전체험관, 지역활력타운, 청년임대주택 건설은 정주인구와 생활 인구를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며, 만화특화 시립도서관, 모자 축제 및 관련 사업 전개, 더본 코리아 상주지사 개설 등은 생활인구 확보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 고속화 철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고속화 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모든 분야에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열망인 대구 군부대 유치는 조만간 후보지가 압축될 것이라고 보면서, 최종 유치까지 최선을 다해 하늘이 내리는 기회를 잡아 상주의 대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상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경제와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사와의 대화,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미래가 온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양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고, 선조들처럼 본심을 지키고 길러 타인을 사랑했던 그런 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과 시정의 대표자로서 존심애물 정신이 상주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의 계승·발전·확산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강영석 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념식에서 "존심애물의 정신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상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미래 상주를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